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재 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염규현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of Militar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ANSUNG
UNIVERSITY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재 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of Militar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재 인

이재인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재 인

제2차 세계대전 시 추축국(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패배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다. 연합군은 얄타회담(1945년 2월)에서 한반도의 38도선 분단을 결정하였다. 소련이 진주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미군이 진주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동안 한반도를 국제전장으로 만들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남한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동북아는 해양세력(한·미·일)과 대륙세력(북·중·러)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통일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냉전은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舊소련은 붕괴되었고 동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동구권 붕괴로 북한은 1990년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1인 수령 독재 체제를 더욱 위협하였다.

북한은 체제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도 6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 등 지속적인 도발행위가 있었다.

다행히도 2018년 한반도는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역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미정상은 북한의 비핵화(FFVD :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UFG와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에 합의하였다. 대북경제재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남북경협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북미수교를 통해 북한 체제 안정 및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장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이 아닌,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 및 경제발전을 통한 체제보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군사통합도 중요하다. 북한의 지역 군 사령관이 무장단체 및 지방군벌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이 주변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는 국제적 분쟁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한 안정적인 북한군 해체 및 한국군 주도의 남북 군사통합이 중요하다.

남북군사통합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 타국 군사통합사례 연구,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안보의 외주화 방안, 한반도 미래 인구동향 등이다. 안보의 외주화 방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의 규모를 20~30만 명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안보의 외주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을 수행할 때 비전투분야의 외주화를 통해 1991년 걸프전 때보다 적은 병력으로도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이 타 대륙에서 대규모 지역분쟁을 수행하고 있어 미군의 한반도 전개가 축소 또는 지연될 경우 민간군사업체가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타국 군사 통합 사례(독일중심),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영향요인), 안보의 외주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은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안보의 외주화 방안도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지 고찰하였다.



【주요어】 남북한 군사통합, 주변국 영향요인, 안보의 외주화, 통일한국군, 북한 비핵화, 북미수교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2
제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장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 1절 군사통합의 개념	6
1) 통합의 일반화 된 정의	6
2) 군사통합의 개념 정의	7
3) 군사통합과 통일과의 관계	8
제 2절 군사통합의 유형	10
1)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10
2)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	12
3)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 통합	13
4) 남북한 통일 시 채택 가능한 군사통합 유형 분석	14
제 3절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	16
1)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	16
2) 서독 연방군 주도의 군사통합	20
3)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1
제 4절 탈냉전 이후 안보의 외주화	32
1) 안보의 외주화 사례 분석	33
2) 안보의 외주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5
제 3장 군사통합시 동맹국 및 주변국 영향요인 분석	38
제 1절 동맹국(미국)	38
1) 미군 해외주둔 정책의 정치·군사적 의미	38
2) 美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39

3) 한반도 통일과정과 미국의 외교적 역할	40
4) 통일완성단계에서 미국·주한미군의 역할	42
제 2절 주변국	46
1) 중국	46
2) 일본	48
3) 러시아	50
 제 4장 남북한 군사역량과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52
제 1절 남북한 군사력 비교	52
1) 북한군의 주요 군사력	52
2) 한국군의 주요 군사력	58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59
제 2절 통일한국군 전력구조 방향	61
1)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61
2) 통일한국군 조직 시 북한군 출신 편입 규모	66
3) 통일한국군의 국방·안보정책과 군사전략	67
 제 5장 결 론	 70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70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72
제 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74
 참 고 문 헌	 76
 ABSTRACT	 80

표 목 차

[표 2-1] 군사통합 유형	10
[표 2-2] 남북한 국력비교(2016년 기준)	11
[표 2-3] 1989년 동·서독의 국력/주요 생활요소 비교	17
[표 2-4] 통일 이전 동·서독 군사력 현황	20
[표 2-5] 통일 후 독일연방군 인력구조	25
[표 2-6] 동독인민군의 서독연방군 편입규모 변천과정	27
[표 2-7] 동독인민군 편입자의 구 서독군 대비 봉급수준	27
[표 2-8] 동독인민군 간부 재교육 내용	28
[표 2-9] 유럽재래식군비협정(CFE)에 따른 독일군의 감축 규모	29
[표 2-10] 동독인민군 무기 및 장비 처리현황	30
[표 3-1]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작전 병력 소요	44
[표 4-1]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54
[표 4-2] 북한 미사일의 형태별 능력	56
[표 4-3] 2018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57
[표 4-4] 북한의 핵전략 변화	58
[표 4-5] 남북한 군사력 비교	60
[표 4-6] 한반도 주변국의 영토 크기와 병력 수 비교	62
[표 4-7] 한반도 주변국가 국방비와 병력 수 비교	62
[표 4-8] 통일 한국군 규모 판단(정충열)	64
[표 4-9] 통일한국군 적정 병력규모 관련 학자들의 연구사례	65
[표 4-10] 카프만식 다중회귀선형 분석법에 의한 군사력 규모	66
[표 4-11] 미래의 위협과 도전형태	69

그림 목 차

[그림 4-1]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016년 4월) -----55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차 대전 종전 후 동북아는 대륙세력(북·중·러)과 해양세력(한·미·일)이 국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북한은 경제체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주도의 비확산 체제에 도전해 왔으며 현재 핵전력 완성단계에 있다. 美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규모를 약 60여 개로 판단하고 있다.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4월)과 평양(9월)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남북 및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군사통합과정에서 북한군부 및 북한 체제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한 군사통합전략’을 연구하였다.

한반도 해빙무드가 조성되었다고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내용과 방식, 로드맵과 시간표를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상대방의 선의와 진정성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마이클 그린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도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공허한 평화체제는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³⁾ 또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정치체제가 변해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1) 『중앙일보』 2018년 7월 6일,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기사인용

2) 『한국일보』 2018년 7월 2일, 김근식 교수 기고문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

3) 『중앙일보』 2018년 5월 12일, 마이클 그린 칼럼 ‘공허한 평화체제가 한·미동맹 약화를 노린다’

은 넘어야 할 난관이 많고 낙관하기는 너무나 이르다. 現정부의 대북정책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성과가 나타나고 공과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비(無備)는 유환(有患)을 부른다고 하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경제협력이 상황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고 있지만 독일처럼 한 순간에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과 남북한 군사통합을 준비하지 않으며 많은 혼란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군의 안정적인 해체 및 일부 북한군인의 통일한국군 편입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군 중심의 안정적인 군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 군 사령관들이 무장단체와 지방군벌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테러와 무력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외국군의 개입을 초래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적인 분쟁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대 군인들의 생계 보장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 군인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통일과 사회 안정을 방해하는 불만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안정적인 군사통합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분단국들의 통합과정을 보면서 남북한 군사통합 문제가 다루어졌다. 소련 붕괴와 동구권 해체 등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북한은 고립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북한이 곧 붕괴하여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반도가 흡수통일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그리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대북포용 및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 및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통합이론에 관한 연구로서 이창욱은 형태 측면형태 측면에서는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대등적 합병통합으로 구분하고, 과정측면에서

는 점진적·단계적 흡수통합과 급진적 흡수통합으로 군사통합유형을 구분하였다.⁴⁾ 그리고 장흥기와 제정관은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대등적 합병통합으로 구분하고, 과정측면에서는 일방적 흡수통합과 보완적 흡수통합으로 구분하였다.⁵⁾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영향으로 분단된 후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연구 분야에서, 김도태는 베트남의 분단구조와 베트남전 전개과정, 무력통일 완성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⁶⁾ 김동명은 독일 통일 20주년에 따른 통일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치·경제·대외정치·국방 및 사회분야의 통합과정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⁷⁾ 유지호는 남·북 예멘의 분단 경위와 1차 통일과정, 그리고 재분단의 원인과 무력에 의한 2차 통일과정을 분석하였다.⁸⁾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북한도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관심과 북한체제의 위기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과탄지경에 이른 북한의 경제로 인해 탈북자와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 황장엽비서 등 북측 고위 인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북한 정권 핵심계층에서도 균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관련된 연구 내용으로는 윤덕민의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¹⁰⁾, 추부길의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¹¹⁾이 있다. 추부길은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시 대처요령,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독일통일외교와 군사통합과정에 대해

4) 이창욱(1998),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 국군의 역할』, 서울 : 세종연구소, pp.12~13

5) 장흥기·이량·이만중(1994),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92

6) 김도태(1993),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 서울 : 웃고 문화사

7) 김동명(2010),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서울 : 한울아카데미

8) 유지호(1997), 『예멘의 남북통일』, 서울 : 서문당

9) 백승주(2009), 『포스트 김정일 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161

10) 윤덕민(1999),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1) 추부길(2016),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주)에듀팩토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된 중전국가인 우리의 능력만으로 통일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선행연구나 관련논문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미흡하게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위의 사례 연구를 참고하여 독일의 통일외교와 군사통합사례, 통일한국군 조직방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방향을 기술하였다.

제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경험했다. 동북아시아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것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의 비확산체제 도전으로 냉전불화는 지속되고 있고 장래 정세는 불투명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해빙무드가 조성되어 경협 확대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같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평화적인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반도 군사통합은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모든 부분을 기술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독일 군사통합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동맹국 및 주변국 영향요인 분석과 남북한 군사역량,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적정병력규모,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우선 군사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군사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통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군사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①2차 세계대전 승전국에 의

한 강요된 분단 및 냉전 갈등으로 인한 분단의 장기화 ②주변 강대국과의 군사동맹 체결과 외국군대의 주둔 ③강력한 통일국가의 등장을 우려한 주변국의 반발 ④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지역안정군으로 주둔하고 비핵화 정책 유지 ⑤무력충돌 없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군사통합 등 한반도와 유사점이 많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화적인 군사통합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주변국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한반도 분단은 얄타체제의 산물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통일도 주변 4강이 합의하고 보증해야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주변국이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 외에 탈냉전 이후 안보의 외주화 방안이 한반도의 현실에 적합한지 고찰하였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냉전해체 이후 병력을 감축하고 대규모 지역분쟁에서 민간 군사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현대화 된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도 주요 전력을 임대하여 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도달하여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병력집약형 군 구조를 탈피하려면 비전투분야를 외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보의 외주화가 진행된다면 향후 통일한국의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군사통합의 이론 고찰과 사례분석은 군사 전문가들의 저서를 많이 참고했다. 이를 통해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연구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충돌 후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군사통합은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안보의 외주화 방안은 다양한 국제 사례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통일 및 군사통합 시 주변국 영향요인은 군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전문가의 서적도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및 군사통합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제 2장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군사통합의 개념

1) 통합의 일반적인 정의

통합의 일반적 의미는 ‘여러 가지를 모두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먼저 통합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개념화 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통합을 “둘 또는 그 이상의 행위 주체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행위 주체자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통합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¹⁾ 하스(Haas)는 통합을 “몇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정치행위자들이 충성심이나 기대, 정치적 활동 등을 기존의 관계되는 국민이나 국가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며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린드버그(L. Lindberg)는 “국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그들의 외교정책이나 기타 주요 정책을 행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배제하거나 혹은 새로운 중심 기구에 의사결정을 위탁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에치오니(A. Etzioni)와 칼 도이취(Karl W. Deutsch)등은 통합을 과정보다는 상태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에치오니에 의하면 통합은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정치체계에 대해 정치적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칼 도이취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일정 영역 내에서 이들 내의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을 만한

1) 그는 통합의 현상을 가치통합, 행위자통합, 부분과 전체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통합을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통합이란 통합되는 단위들이 상호 관련된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념적 통합을 말한다. 행위자 통합이란 정책결정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단일화되는 점에서 정치통합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분과 전체통합은 부분이 독자적인 지위는 포기하고 전체에 대한 충성심을 이양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중앙집권적 방법과 전체가 자신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부분에 나누어 줌으로써 전체를 소멸시키는 분산형 통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영호 · 박종철(1993),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민족통일원, pp.28~32

기대를 오랫동안 확신하기에 충분한 공동체 의식과 기구 및 관행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합을 하나의 조건이 이뤄진 상태로 보면서 일정한 집단 내에서 이해와 견해 차이를 조정하며 필요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구성원 사이에서 생기면 통합이라고 보고 있다.²⁾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통합의 개념은 “둘 이상의 체제들이 정치적·제도적 결합 등을 통하여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단일 체제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공감하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체제들의 개별적 기능체제들을 하나로 묶어 단일체제의 공동 기능조직 체제로 통합시켜 통일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낮은 차원에서 국가 내부적으로 동일 민족 간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합치는 예로써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상의 통합, 문화통합, 군사통합 등을 일례로 들 수 있다.³⁾

2) 군사통합의 개념 정의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군사통합에 대한 개념을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양주는 군사통합이란 국가통일을 위한 핵심 분야로 서로 다른 군사사상 위에 수립된 조직, 기능 및 제도를 통일국가의 이념과 국가목표에 맞게 외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자 만들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제정관은 군사통합이란 군사전반의 제반기능과 조직체계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군사 활동의 일원화와 공동화를 위한 조직적 결합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2)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5 / 이문규, [남북한 통합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 논총 84호 (1998) p.14에서 재구성

3) 정충열(2014),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시간의 물레, p.31

4) 권양주(2009),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접근 전략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p.34

5) 제정관(2001),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통일국군 건설방향”, 군사논단 제 29호, p.62

정충열은 군사통합의 여러 개념들의 공통점과 남북한 군사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사통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군사통합은 국가통합의 핵심과업으로 두 국가의 군대를 합치는 과정이며, 합쳐진 이후의 상태를 뜻한다. 군사통합은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서 통일된 국가이념과 목표, 추구하는 가치가 맞아야 하고 다른 두 개의 지휘체계가 통일된 하나로 묶이면서 군 조직과 기능 및 군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⁶⁾

3) 군사통합과 통일과의 관계

한반도는 알타체제의 희생자가 되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분단되었다. 한국전쟁(1950. 6. 25 ~ 1953. 7. 27) 종전 후 6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였고, 190만여 명의 군사로 대치중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려면 정치·군사통합이 필수적이다.

정치통합은 하나의 이념과 제도로 구성되는 단일한 정치체제가 집단구성원 모두를 규제하는 상태, 또는 주권의 결합상태를 말하므로 정치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통합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문화적 생활과 의식이 통합되어야 한다. 반면에 군사통합은 두 개 이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제반 기능 및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하나로 일원화하는 조직적인 결합과, 군대 인력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군사통합은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국가통합의 일환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⁷⁾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의 관계를 보면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통합 방식에 따라 군사통합의 과정과 방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

6) 정충열(2014), 전거서, p.33

7) 권양주는 군사통합을 추진할 때 ①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②군사지휘체계의 통합(일원화)과 군조직의 통합, ③병력의 통합, ④장비, 무기체계 및 물자의 통합, ⑤시설의 통합, ⑥교리 및 교육훈련 체계의 통합, ⑦동원·병역제도의 통합, ⑧방산업체와 군사기술 조정 및 통합, ⑨관련법규 및 제도의 통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권양주(2009),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 연구원, pp.34~35

다. 그러나 예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통합은 이루어지더라도 군사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치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⁸⁾ 고려 무신정권이나 5·16 군사정변의 역사에서 보듯 군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군과 정치는 상호 영향을 끼치는 상호작용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통합과 군사통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선후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통일과 군사통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통일이 우선 달성되거나, 적어도 통일 논의가 먼저 시작될 확률이 높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군대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상황이 아니면, 국가 간에 통일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군사통합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 통일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통일협상과 군사통합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군사통합은 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통일문제가 주변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군사통합이 통일협상에 먼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내부적으로 통일여건이 급진전 될 때,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국가들은 독일군이 67만여 명의 군대로 재편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으며, 통일 이후 새로운 군사력을 건설할 때 4년 이내에 37만여 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⁹⁾

한반도의 상황도 통일문제가 목전에 다가오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로 무장한 190만여 명의 통일한국군이 초래할 동북아지역 군사력 균형의 붕괴와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전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군사통합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8) 1990년 5월 22일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통일예멘이 탄생하였으나 군사통합에 실패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하여, 1994년 7월 7일 북예멘군이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2차 통일을 이루고, 남예멘군을 강제로 흡수 통합하였다. 김의식(2014),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전략』, 도서출판 선인, p.40

9) 1990년 11월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유럽재래식군비협정’에 따라 장갑차 4,166대, 전차 3,446대, 야포 2,705문, 전투기 900대로 한정되었다. 김의식(2014), 상계서, p.40

제 2절 군사통합의 유형

군사통합의 유형은 통합 당사국간의 강제성(무력사용) 여부와 통합 방식에 따라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2-1> 군사통합 유형

구분		강제성(무력사용)여부	
		있음	없음
통합 방식	흡수 통합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
	대등 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

※ 출처 : 김의식(2014),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도서출판 선인, p.41

1)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주도권을 가진 국가의 군대가 나머지 군대를 흡수하고, 동일한 군사체제로 단일화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군사통합은 독일의 통합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의 군대가 모두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주체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일방이 주도하여 단일체제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1990년 10월 2일 동독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 동독군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10월 3일 통일과 함께 동독군에 대한 지휘권이 서독군으로 넘어가면서 동독인민군은 서독연방군에 흡수되었다.

통합이 완료되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측에서 지휘체계상 주요 직위와 병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무기 및 통신체계, 교육훈련체계, 새로운 국방정책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통합대상 군대의 군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상호합의하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므로, 통합주도국의 군대가 통합대상 군대의 주둔지역으로 진입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한 거부감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대상 군대의 군인들에게 지불해야할 보상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¹⁰⁾

한반도 정세에서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큰 혼란 없이 연착륙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을 흡수통합하는 상황이다. <표 2-2>에서 보듯 한국의 국력이 월등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을 이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의한 군사통합이 진행될 때도 한국군 주도의 북한군 흡수통합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2-2> 남북한 국력비교(2016년 기준)

구분	국민총소득	1인당 GNI	무역총액	총인구
한국	1,639조 666억	3,198만원	9,016억 달러	5,125만명
북한	36조 3,730억	146만원	65억 달러	2,490만명
격차	45배	22배	138배	2배

※ 출처 : 통계청, 2017년 남북한 주요통계지표 보도자료

두 번째, 북한체제가 내부혼란을 극복하지 못해 급변사태¹¹⁾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고 한국군 주도로 북한군을 흡수통합 하는 상황이다.

10) 김의식(2014), 전계서, pp.41~42

11) ‘급변사태’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또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상황을 말하며 급변 사태의 유형에는 지도자 신상의 변화, 쿠데타 발생, 내부로부터의 변혁 요구와 주민봉기 등이 있다. 유호열(2006),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 한울아카데미, p.20

2)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은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서로 일대일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순히 합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유형이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나 예멘의 1차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완전히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유형이다.(군 지휘체계상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이 균등하게 배분하여 북예멘 대통령이 통합군 사령관을, 남예멘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을, 북예멘 참모총장이 군참모총장을 차지하고, 북부사령부는 구 북예멘의 군조직이, 남부사령부는 구 남예멘의 군 조직이 그대로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인 지휘체계로 유지되어 완전한 군사통합에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군사사상과 군사제도 면에서 유사한 조직체계와 병력규모, 무기 및 통신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 비슷한 부분부터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직후에는 지휘체계상 상충부 구성을 두고 양쪽 군대 지휘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차 군사력을 축소·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병력감축 대상과 규모, 무기체계 운용,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문제, 새로운 국방정책 수립 등에서 갈등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통합방안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협상 초기부터 양쪽 군대 지휘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추진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양쪽 군대의 상충부부터 통합한 다음 하충부를 통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합진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¹²⁾

12) 김의식(2014), 전계서, p.43

3)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 통합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 통합은 베트남의 사례¹³⁾에서 보듯이 당사국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전국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유형이다. 패전국 군대는 무장해제 당한 가운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불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무기 및 통신체계는 승전국의 체계로 흡수되거나 도태당하며, 군 시설도 일부만 재활용된다.

이런 유형의 통합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신속한 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통합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패전국 군인들이 소규모라도 병력과 무기 그리고 지휘체계를 보존하고 있다면, 비록 전쟁에는 패배했지만 통합대상으로 전략함에 따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통합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는 군사통합과정에서 패전국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점령군으로서 약탈행위를 하거나 억압적인 점령지 관리정책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에게 패전국에 대한 향수를 유발시켜 저항세력을 보호함으로써 군사통합을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 있다.¹⁴⁾

1950년 한국전쟁¹⁵⁾으로 남북한 주민들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오늘날 무기의 살상력은 엄청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외국군대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족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은 적합하지 않다.

13)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월맹군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을 통일한 다음 남베트남군 출신들을 조사·분류 후 재교육시키거나 격리수용 혹은 처형함으로써 군사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유제현(1992), 『월남전쟁』, 서울 : 한원, p.461

14) 김의식(2014), 전계서, p.44

15)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이르기까지 남한은 14만 7천여 명이 전사하고, 70만 9천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84만여 명의 민간인 손실이 있었다. 반면에 북한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6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여만 명에 이른다. 김학준(1989), 『한국전쟁』, 서울 : 박영사, pp.345~346

4) 남북한 군사통합 시 채택 가능한 유형 분석

지금까지 3가지의 군사통합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군사통합 유형은 ‘상호합의 하에 한국군 주도의 북한군 흡수통합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불투명하다.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으로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통합’과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력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한 체제 위기가 올 경우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과 전면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을 실시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도 성장하여 체제가 안정된다면 한국군 주도의 흡수통합을 거부하고 분단 상황을 유지하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과 동맹국¹⁶⁾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누가 승리해도 민족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도 우리에게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남북이 군력을 동등하게 반분할 경우 예멘의 사례와 같이 사소한 갈등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면전이나 재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국 군대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국가 외교안보전략수립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지역패권국가의 출현을 억지하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가 석유와 같은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경제가 안정된 것도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와 같은 국제질서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한

16)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국과 1961년 7월 11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했다.

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에 전방전개 된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이 지역안정군으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미관계를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력을 동등하게 반분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실세들이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친중국·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거나 핵무력을 통한 국가안보를 주장한다면 국가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 군은 한국전쟁 종전 후 오랜 세월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중심의 무기체계를 유지해왔다. 무기체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연합군사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새로운 군사동맹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 지역패권국가 출현을 억지하려고 하는 역외 국가라는 점도 우리의 국가 이익과 부합한다. 핵보유도 현실성이 없다. 우리가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과 같은 심각한 경제제재를 받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은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는 다르게 알타체제의 희생자가 되어 분단된 한반도는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면 타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선진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도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군사통합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한의 190만여 명의 병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군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폐기하여 통일한국이 WMD(대량살상무기)비확산체제를 준수할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이 지역안정군으로 주둔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3국의 첨단 군사력에 국경선이 포위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특정국가를 가상적국으로 상정하는 지역동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지역 역할을 할 것임을 중국에 설득

해야 하며, 역내 집단안보체제 구축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용도 두텁기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통일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유리할 것이다. 낙후된 북한경제의 재건, 주변국에 대한 외교력, 통일한국군의 전력 첨단화 능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운용 능력 등 전반적인 국가건설능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 및 군부의 동의와 협조하에 한국군이 북한군을 흡수통합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합의 하에 한국군 주도의 북한군 흡수통합’ 방안이 한반도 통일시 가장 바람직한 군사통합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 3절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

1)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

1945년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추축국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이후 미국·영국·프랑스의 점령지 서독은 1949년 9월 20일에 이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입각한 내각구성이 완료되어 독립국가로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반면 소련의 점령지 동독은 1946년 4월 21일 창설된 독일통일사회당이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선포하여 독일은 결국 동·서독 분단이 초래되었다. 이후 1990년 서독 주도의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독일은 분단국가로 존재하였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서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동독의 총체적인 국력은 다음의 <표 2-3>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 사민당의 빌리브란트가 서독 수상으로 집권하면서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방정책¹⁷⁾을 시행하고, 동독과의

17) 1969년 10월 28일 서독의 빌리브란트 수상에 의한 발표된 동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독일 내 2개 국가 존재 인정, 양독 간 불가침 조약 체결, 독일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 양독 간 경제·문화 교류 협력 추진, 대소련 및 폴란드 무력사용 포기, Hallstein원칙 폐기 등이다. 이철기(2002),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p.21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민족화합을 도모하며,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서독정부의 대동구권 화해노력에 따라 1970년 8월 12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협정이 체결되었다.¹⁸⁾ 그리고 1972년 12월 21일에는 동·서독 기본조약¹⁹⁾이 체결되었으며, 기본조약에서 양독이 서로를 국제법상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여 1973년 9월 18일 UN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표 2-3> 1989년 동·서독의 국력 / 주요 생활요소 비교

구분	서독	동독
인구	6170만명	1640만명
면적	24만 9천 km ²	10만 8천 km ²
국민총생산(GNP)	2조 2600억 DM	2300 ~ 3000억 M
1인당 GNP	40,747 DM	11,022M(7,654DM) ²⁰⁾
저축률	13.9%	7.0%
100명당 전화기 수	98대	9대
1인당 주거면적	35.5m ²	27.0m ²
실업률	7.1%	0%

※ 출처 : 정선구·문채봉(2010), 『독일통일과 군간부 인력획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15~18 참고하여 재구성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1987년에는 약 1천만 명이 양독을 상호방문 하였고, 이주협정에 의거 1983년부터 매년 3만여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양독간의 경제교류는 역내교역으로 인정하여 무관세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며, 통신·문화·언론 및 방송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해 통일 후 양독의 동질성 회복에

18) 독·소 불가침협정 5개항 : ①유럽 평화유지, ②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무력행사 포기, ④ ‘오데르-나이세 강’을 포함한 현 국경선 존중, ⑤독일민족 자결권에 의한 통일의사 존중. 제정관(1998),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통일 국군건설방향”,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p.45

19) 주요내용은 유럽 모든 국가들이 국경선 불가침과 영토보전, 그리고 주권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무력적 위협이나 사용 포기를 규정하였으며, 동독을 독립정부로 승인하였다. 양독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의식(2014). 전계서, p.45

20) 당시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44:1로 환산한 서독 마르크로서 전환한 가치.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서독정부가 주변국을 상대로 통일을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1989년 7월부터 동독시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주가 급증²¹⁾하여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동독 호네커 서기장에게 개혁 개방에 의한 공동번영을 제안했지만 거부되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동독주민들의 시위가 계속 확산되자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 서기장의 사임과 동시에 내각이 총 사퇴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동·서독의 화폐통합과 국영 기업 민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우파연합 독일연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따라서 1990년 5월 18일 통화·경제·사회보장 동맹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서독과 연합국들이 대외관계에서 매듭을 짓는 ‘2+4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10월 3일 동독 의회가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 된다’고 결의함으로써 마침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서독의 다각적인 외교노력은 전승 4대국으로 하여금 독일 통일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당시 서독정부가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독일 통일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으나, 진행속도와 형태는 적절히 제어된 구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승4대국과 주변국들의 입장²²⁾은 ‘2+4협상’²³⁾이라는 틀을 수용함으로써 해소하였다.

21) 1989년 7월부터 동독에서 서독을 포함한 타국으로 이주한 전출인원은 7만여 명에 이르렀으나 타국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인원은 4~5천 명 수준에 불과하여 동독주민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하였지만 동독 주민들의 대대적인 국외탈출을 동독정부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다. 정선구·문채봉(2010), 『독일 통일과 군간부 인력획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20

22) 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은 독일 통일을 최대한 늦추어 약 10~15년 또는 4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였다. 손기웅(200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p.16

23) 1990년 2월 14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동·서독과 전승 4국의 외무장관이 회동하여 독일의 통일과 독일 인접국 간의 안보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의 틀로 동독·서독+미국·소련·영국·프랑스가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1차 협상은 1990년 5월 4~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어 통일독일의 NATO잔류문제를 협상하였다. 김의식(2014), 전개서, p.48

- ② 당시 ‘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on House)’ 구상이 시론적으로나마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전승4대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군축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서독 간 국경선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설득하였다.
- ③ 통일 후 방어위주의 비핵주의를 근간으로 병력규모 37만 명의 군사소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동독지역에 외국군의 주둔을 금지할 것이며, 핵과 생화학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주변국의 안보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④ ‘2+4협상’과 ‘양자 간’ 협상과정에서 서독정부는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게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에 앞장 설 뿐만 아니라, 유럽 평화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 ⑤ 1990년 7월 7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2+4협상’에서 오데르-나이세 강을 통일독일과 폴란드간의 항구적인 국경선으로 확정함으로써 영토욕구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통일은 외부적으로는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국제적 상황변화, 즉 유럽의 통합과정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세력의 재편성 과정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상호 승인한 상태에서 내독관계를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인적·물적 교류와 경제적 상호협력²⁴⁾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와 지식인 등 여론주도층에서 먼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동·서독 주민들에게 독일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⁵⁾

24) 서독 연방은행 통계에 따르면 1950~1989년 서독이 동독에게 재정 지원한 총액은 약 900억 마르크(450억 유로 상당)였다. 김동명(2010),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서울 : 한울 아카데미, p.95

25) 김의식(2014). 전개서, pp.47~49

2) 서독 연방군 주도의 군사통합

(1) 군사통합전 대내·외 환경 조성

1990년 통일 이전까지는 동·서독 모두 군사통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서독연방군은 독일분단의 국제적 성격,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의 지속 등을 이유로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NATO와 소련 중심의 WTO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는 국제전략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동독인민군은 독일 통일 자체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았다.²⁶⁾ 서독연방군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시도하기에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 군사력이 오히려 빈약한 상태였으므로 독일 통일과 이에 따른 군사통합에 대한 준비는 전무한 실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1989년 중반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는 통일과정에서 체제가 완전히 다른 서독연방군과 동독인민군을 통합하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 다만, 동·서독 군대는 분단 이후 전쟁이나 직접적인 전투행위가 없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통일을 방해할 만큼은 크게 형성되지 않아서, 군사통합을 추진할 때 심각한 저항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서독 군대가 통일을 목전에 두고 군사통합을 위해 국내적·국제적으로 조성했던 환경을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표 2-4> 통일 이전 동·서독 군사력 현황

구분			서독	동독
병 력	현 역	소계	495,000명	173,000명
		육군	345,000명	120,000명
		해군	39,000명	16,000명

26) 동독인민군 장교들은 1989년 전환기에 동독군대가 각자의 병영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민군이 해체되는 데 반대했으며, 실제로 통일달성 4일 전 인민군 장성들은 명령에 따라 ‘파리까지’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베르너 바이텐펠트·칼-루돌프 코르테 엠틀(1998), 『독일통일백서』, 서울 : 한겨레신문사, p.110

	공군		111,000명	37,100명
	국경수비대		20,000명	47,000명
	기 타	예비군	750,000명	330,000명
		외국군 (7개국 14사단)	401,700명	소련군 385,000명
장 비	전차		4,227대	3,150대
	함정		126척(잠수함 24척 포함)	114척
	항공기		672대	307대

※ 출처 : 권양주(2009),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64

동·서독 군은 1987년 9월 동독공산당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의 서독 공식방문을 계기로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교류에 합의하고 군축문제에 대한 전권위임자들을 임명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1985년 7월 서독과 동독 및 체코를 포괄하는 지대에서 화학무기를 철수하고 생산을 금지하며, 타국으로부터 반입을 금지하는 비화학무기 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

1986년 10월에는 서독·동독·체코의 국경을 중심으로 양쪽 150km씩 300km 넓이의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의 폐기, 핵무기의 현대화 및 반입 금지 등을 실천하는 비핵화량 건설에 대해 협상하였다. 그리고 1987년 8월 27일 양측은 이념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서진영 간의 유일한 투쟁방법은 평화적 체제경쟁이며, 평화공존에 동의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느 일방이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중부유럽에 방어진대를 설정하여 그 지역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를 완전히 철수하거나, 혹은 일정한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서독정부는 독일군 통합과정에 앞서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주변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먼저 하였다. 동·서독 군대를 통합했을 때 강력한 군대가 재탄생하는 것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통일 독일의 군사적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2+4 회담’과 영수회담을 통해 전승4대국에 의한 독일 점령체제의 공식적인 종결 선언을 이끌어내고, 경제적 지원 약속²⁷⁾을 통해 동독 흡수통합과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한 소

련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문제와, 독일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군대의 철수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먼저 해소함으로써 주변국들이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에 동의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였다.²⁸⁾

(2) 서독 연방군의 동독인민군 통합과정

① 통일독일군 병력규모 설정

독일 통일과정에서 향후 통일 독일군의 병력규모는 동부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승4대국에게도 최대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동부유럽 국가들은 통일독일군의 규모를 바이마르공화국 시대로 회기 하여 10만 명을 상한선으로 설정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상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설득력이 없었다. 반면에 협상의 중요한 상대였던 소련은 독일이 두 번 다시는 타 국가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냉전시대 서독연방군의 약 50% 수준인 20~25만 명 정도로 설정하여 군사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병역의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인 43만 명 수준, 소련이 우랄산맥 이서지역에 유지할 규모와 유사한 38만 명 수준, 동독의 마지막 정부에서 제시하였던 20만 명 수준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37만 명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 7월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소련의 동의를 확보하고, 1990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협상'에서 최종적으로 37만 명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국방비가 삭감됨에 따라 3만 명을 추가로 감축서 34만 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²⁹⁾

27) 1990년 6월 22일 소련에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공여했으며, 동독지역으로부터 소련군 철수 비용으로 125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소련의 경제회생을 위해 287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명(2010). 전계서, p.144

28) 1990년 9월 12일 '2+4'조약을 체결하여 폴란드와의 국경을 오데르-나이세 강으로 확정하고, 소련군은 동독으로부터 1994년까지 철수를 완료하며, 동독지역에 핵무기 배비 및 외국군 주둔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김의식(2014). 상계서, pp.49~52

29) 1995년 3월 15일 독일 국방장관은 매년 감소되는 국방비(1991년 536억 5백만 마르크에서 1995년 475억 마르크로 감소)로는 적정수준의 투자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병력 3만명 감축,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동원병력 19만 명 축소안을 발표하였다. 하정열(2010),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 방안』, 서울 : 팔복원, pp.242~245

② 단계별 통합추진

독일의 군사통합은 1990년 7월 콜 서독수상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코카서스에서 회동하여 통일독일이 NATO에 가입하는 것에 소련이 동의하고, 통일독일군의 병력규모를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독일의 군사통합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첫 번째는 준비단계로서 1990년 6월부터 서독국방부가 동독국방부에 통합대비단을 설치했던 1990년 8월까지로 볼 수 있다. 서독국방부는 ‘2+4협상’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 다음 동독지역 파견대 형식으로 통합대비단을 설치하였다. 통합대비단은 동독국방부에 머물면서 동독인민군의 병력·병영시설 및 물자·관련예산·복지제도 및 시설·하부조직·통신망·군의 경제활동 등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유효화되어 동독인민군 지휘부로부터 군령권과 군정권을 인수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연구하였다.

두 번째는 인수단계로써 1990년 8월 서독국방부가 통합대비단을 ‘사령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실제 통일조약이 유효화되기 이전까지로 서독국방부가 동독인민군에 대한 군축과 동독국방부에 대한 인수작업을 개시한 시기이다. 서독국방부는 1990년 8월 25일 ‘동부지역사령부’를 설치하고 약 2천여 명의 연방군을 동독에 파견하여 군사통합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하여, 동독인민군의 감축과 동독국방부의 임무를 완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이 유효화되어 서독연방군이 동독인민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순간부터 서독국방부가 군사통합 1차 목표시한으로 설정하였던 1991년 3월 31일까지의 시기로서 주로 동독인민군을 해체, 재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통일과 동시에 서독국방부는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 예하에 육군 동부지

30) 베르너 바이텐펠트·칼-루돌프 코르테(1998), 전계서, p.110

역사령부, 해군동부지역사령부, 공군동부지역사령부를 설치하여 동독인민군을 예속시키고, 국경수비대를 해체시키는 등 동독지역의 군축을 추진하였다.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는 동독인민군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사단급 이상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요원을 서독연방군 출신으로 교체하였으며, 미래 연방군의 군 구조에 부적합한 부대와 근무처는 단계적으로 해체시켰다. 그리고 동독인민군이 사용하던 무기와 탄약, 군사장비와 시설들은 전량 인수하여 재평가 후 재활용 또는 폐기하였으며, 소련군이 동독지역에서 철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착기로서 동독인민군에 대한 1차 개편을 완료하고 1991년 4월 1일부로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통일독일연방군에 이양한 순간부터 동·서독군 출신 군인들 간의 인적통합을 추진했던 시기이다. 동부 지역에서 개편된 부대들을 각 군에 예속 전환시킨 후 동부지역사령부가 1991년 6월 30일부로 해체됨에 따라, 그 이후의 군사통합은 국방부 및 각급제대 부대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2년 6월 30일부로 구 동독인민군 출신 간부들에 대한 연방군으로의 최종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1994년 8월 31일 소련군이 철수하였다. 1995년 동독인민군이 사용했던 마지막 전차가 파기되고, 1996년 3월 폐기 대상 장비 보관창고가 최종 처리됨으로써 일부 부대의 재배치와 구 동독지역의 시설 보수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군사통합이 완료되었다.³¹⁾

③ 통합 이후 군대운영과 분야별 통합

가) 독일연방군 운영

군사통합 이후 독일연방군은 인력구조를 다음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 약 25만 5,400명(69%), 해군 3만 2,200명(9%), 공군 8만 2,400명(22%)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본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총 37만 명의 병력 중에서 22만 명은 장기직업군인으로, 15만 명은 의무복무자 및 연방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으로 구성하였다.

31) 김의식(2014). 전계서, pp.52~56

<표 2-5> 통일 후 독일연방군 인력구조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370,000명	255,400명	32,200명	82,400명
장기복무자	214,000명	132,025명	24,200명	57,775명
단기복무자	151,000명	119,375명	7,600명	24,025명
훈련장관리요원	5,000명	4,000명	400명	600명

※ 출처 : 주독대사관(1992), “통독 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독관련 연구자료 :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 손기웅(2009), 전게서, p.146에서 재인용.

통일 이후 전·후방 지역개념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동방어·전방위 분쟁 해결 형태로 군사력 운영개념이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군사밀도를 추진하여 1~3개 주에 1개 사단씩 총 8개 사단을 배치하여 행정구역과 책임지역을 일치시켰다. 육군은 단일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야전군과 향토방위군을 통합하였으며, 공군은 비행단을 통일 이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군은 함대를 통일 이전 대비 1/2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였다.³²⁾

나) 병력통합

군사통합 시 1994년 12월 31일까지 병력을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0년 8월 31일 동·서독 간에 체결되었던 [통일 조약]의 [부록 I : 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인민군의 의무징집병은 자동으로 통일독일연방군에 편입시키고, 장기복무군인과 경력군인은 3단계를 거쳐 연방군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다(1단계 : 동독군인들을 대기상태자 또는 계속활용자로 분류한다. 2단계 : 2년간의 계약직으로 인수한다. 3단계 : 2년간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군복무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통일협약에서 규정한 군인권리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면서 서독연방군의 흡수통일 방안에 위기감을 느낀 동독인민군 직업군인들은 1990년 8월 양 독일 정부에 동독인민군의 장래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동독 인구에 비례하여 최소 7만 명의 동독군을 유지해 줄 것과 동독인민군을 서독연방군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인

32) 김의식(2014). 전게서, pp.56~57

사선발위원회에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독연방군이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가운데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유효화됨에 따라 동독인민군은 완전히 해체되고, 8만 9천여 명의 인민군과 1만 9천여 명의 국경수비대, 4만여 명의 민간군속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서독국방부로 이관되었다.

동독인민군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과 장기복무군인의 복무관계는 통일과 더불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자원은 선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동독인민군에 적용하였던 전역기준은 ① 장기복무자 및 직업군인이 전역을 신청한 경우, ②장기복무자의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 ③직업군인이 현행법상 의무 복무기간이 끝났거나 이미 지난 경우, ④장기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이 요구되는 인성 혹은 전문적 자질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⑤부족하나 수요에 의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⑥현재까지의 복무위치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해체되거나, 통합·혼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으나,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자와 동독의 국가보안성에서 근무한 자는 즉각 전역시켰다.

동독인민군 출신으로서 통일연방군에 편입되어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5만 명은 개편 후 활용 가능한 직위는 ‘우선 인수’, 불필요한 직위는 ‘선별 인수’, 정치장교 및 심리전요원은 ‘즉각 전역’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 후 선발하였다. 그리고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5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선발과 편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단계는 최초 지원단계로서 1991년 6월 이전 정년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동독 인민군에게 2년간 계약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1991년 1월까지 부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진 전역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7개월분의 퇴직금과 현역 당시 급여의 75%를 연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³³⁾

2단계는 2년간 계약직근무자 선발단계로서 희망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33) 이에 따라 50세 이상의 간부 대부분과 40~50세 사이 간부 중 상당수가 전역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통일 당시까지 잔류했던 동독인민군 장교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이 최초 서독 연방군에 편입되었으나 그 중 약 절반이 1990년 말까지 자진 전역하였다. 손기웅(2009), 전거서, p.160

연방군 각급부대에 배치하여 6~8주간 특별훈련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사상과 근무자질을 점검한 다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8천 명을 선발하였다.

3단계는 최종 선발단계로써 2단계에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년간 관찰한 뒤 근무실적 및 근무평정에 따라 다음의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873명을 선발하여 통일독일연방군에 최종 편입시켰다.

<표 2-6> 동독인민군의 서독연방군 편입규모 변화과정

구분	통일직후	1차 지원	1차 선발	2차 지원	최종선발
계	50,000명	25,000명	18,000명	15,000명	10,873명
장교	24,000명	11,700명	6,000명	5,600명	3,027명
하사관	23,000명	12,300명	11,200명	9,200명	7,639명
병	3,000명	1,000명	800명	200명	207명

※ 출처: 손기웅(200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늘봄플러스, p.160쪽 참고하여 재작성.

독일은 동독인민군출신 군인들을 조기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동독인민군출신 일반병의 급료는 통일 직후인 1990년 11월부터 서독연방군 사병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부터 전역금과 크리스마스 상여금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다만 직업군인에 대한 보수는 구 동독지역 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08년 1월에 와서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였다. 동독인민군출신 제대군인들을 위해서는 연방고용청과 협조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청에 다수의 제대군인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병력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 군 주둔지와 시설, 군부대 소유 부동산 등은 처분하여 구 동독인민군출신 장병들이 사용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 2-7> 동독인민군 편입자의 구 서독군 대비 봉급수준

시기	1991.7.1	1992.5.1	1992.12.1	1993.1.1	1994.1.1	2008.1.1
수준	60%	70%	74%	80%	85%	100%

※출처 :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 방안』 (서울 : 팔복원,1996) ,pp.167~168;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서울 : 한울 아카데미,2010), p.321
 참고하여 재작성.

그리고 연방군으로 편입될 인민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예비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학교기관과 실무부대에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재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연방군 간부에게 필요한 정신덕목과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 의식과 장병 인권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주주의 체제하의 군대운영에 필요한 리더쉽을 함양시키고, 연방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³⁴⁾

<표 2-8> 동독인민군 간부 재교육 내용

구분	대상	교육중점	기간	교육장소	비고
1차 예비 교육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정훈교육	2주	정전교, 참모대	
	중대장 중대선임하사, 위병근무 간부	군법·교범·기타 예 규에 입각한 부대관리 교육훈련 계획 실시 지휘통솔	2주	연방군 장교학교 실무부대	
기타 보수 교육	장기복무자 (복무예정자)	부대 실습	4주	실무부대	
		정훈 교육	2주	지참대	예비교육 미실시자
		보수 교육	12주		2년 이상
		근무지 안내교육		각 부대	근무예정자

※출처 : 주독대사관(1992),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독관련연구자료 ; 군사분야
 200-74, 주독대사관 무관부; 손기웅(200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
 봄플러스, p.178에서 재인용.

다) 장비 및 물자 통합

독일은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군대가 단순통합 시 강력한 통일독일군의 출현을 우려했던 주변국들에게 안보위협을 불식시키고,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력

34) 김의식(2014). 전계서, pp.67~61

감축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1990년 11월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CFE(Conventional Force in Europe, 유럽재래식군비협정)에 따라 통일독일연방군의 전력보유 상한선은 장갑차 4,166대, 전차 3,446대, 야포 2,705문, 전투기 900대, 공격헬기 306대로 제한되었다.³⁵⁾ 그리고 초과 장비는 40개월 이내에 감축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일 당시 동·서독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요 전투장비를 합쳤을 때 <표 2-10>과 같이 전차의 41%, 장갑차의 61%, 야포의 42%, 전투기의 14%를 감축시켜야 했다.

<표 2-9> 유럽재래식군비협정(CFE)에 따른 독일군의 감축규모

구분	보유	상한선	감축
전차	7,133	4,166	2,967(42%)
장갑차	9,598	3,466	6,152(64%)
포	4,644	2,715	1,939(42%)
전투용 헬기	357	306	51(14%)
전투기	1,064	900	164(16%)

※출처 :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 방안』 (서울 : 팔복원, 2006), p.176

서독연방군은 동독인민군이 사용하던 장비와 물자의 계속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장비의 필요성, 군수지원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성, 독일과 소련의 안전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장비 및 물자, 잠정 사용 후 추후 판단해야할 장비 및 물자,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 및 물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구 서독연방군이 사용하던 군사장비만으로도 통일독일연방군 37만 명을 무장시키는데 충분하였으므로, 구 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물자의 93%가 폐기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축대상으로 분류된 전차 및 장갑차는 파기하거나 비군사용으로 전용, 고정 전시용으로 배치, 지상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야포는 파기 혹은 고정전시용으로 배치하고, 자주포는 지상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술항

35) 국방부(2003),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서울 : 국방부, p.174

공기는 파기하거나, 고정전시용으로 배치 또는 지상교육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장비는 ①연방군 및 기타 분야의 자체 소요 충족, ②통일조약에 명시된 공공목적 사업지원을 위해 구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적법단체 무상지원, ③타 정부에 판매, ④NATO회원국에 지원, ⑤전시용 목적으로 지원, ⑥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실제로 군사통합을 추진하면서 동독인민군들이 사용했던 무기류와 장비류는 대부분 폐기하였다. 다음의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약 2,760대의 전차를 포함하여 총 1만 1,429대의 주요 장비가 폐기처리 되었으며, 탄약은 20~30만 톤 중에서 12만 4천 톤은 소련군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폐기 또는 대외 판매하였으며, 일부만 통일독일연방군에서 계속 활용하였다.³⁶⁾

<표 2-10> 동독인민군 무기 및 장비 처리현황

구분		계	산업체 파기	처리 회사 판매	박물관 제공/ 판매	제3국 제공/ 판매	무상 제공	연방 군 내부 전용
폐 기 대 상	계	11,429대						
	전투기	360대	168대	120대	29대	21대	5대	25대
	공격헬기	51대	·	·	5대	42대	·	4대
	전차	2,761대	2,327대	·	33대	263대	·	138대
	장갑차	6,050대	4,160대	·	50대	1,720대	·	120대
	야포	2,199대	1,302대	·	27대	832대	·	38대
기 타	계	3,603대						
	장갑차	3,417대	2,337대		46대	998대		36대
	훈련기	52대	·	18대	10대	24대	·	·
	헬기	134대	16대	48대	29대	10대	10대	21대

※출처 :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봄플러스, 2009), p.165 참고하여 재작성.

3)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6) 김의식(2014), 전계서, pp.61~63

동·서독은 통일 후 군사통합 과정에서 상호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독에 40만여 명, 동독에 38만 5천여 명의 외국군대가 주둔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독일 군사통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첫째, 양독의 군사통합이 유효화되는 시기에 동독군 지휘부와 정치장교들을 모두 전역시켰기 때문에 통합역지 세력들의 저항을 방지할 수 있었다.

동독군 지휘부와 정치장교를 모두 전역시킨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서독 주도로 통일된 독일은 미·독 동맹과 나토(NATO)동맹 체제 및 비핵화 정책을 유지했다. 서독군 주도의 군사통합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소규모라도 동독군 체제가 유지되길 희망했던 동독군의 지휘부와 정치장교들이 나토(NATO)에 반대하고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면 통일독일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전략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둘째, 주변국외교, 특히 동맹외교의 중요성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다. 舊소련과 동구권, 심지어 나토(NATO) 회원국들조차 강력한 통일독일의 출현을 우려했다. 독일은 역외 동맹국 미국을 잘 활용했다. 미국은 주변국가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독일 통일에 유리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도 이러한 독일 통일외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여 통일에 반대하는 주변국가의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과정이 남북한 또는 국제적 분쟁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및 군사통합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셋째, 독일은 군사통합 이후 동독군으로부터 획득한 군사장비와 물자의 해외 판매 및 국내외에 양도가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많은 양의 물자를 폐기처분함으로써 엄청난 비용³⁷⁾을 지불해야 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주변국들과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감축 문제가 상정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0만 여명의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현대화된 한국군 무기체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노

37) 장비 및 물자 처리에 5억 4940만 마르크와 탄약 처리에 8억 6640만 마르크가 사용되었다. 국방부(2003),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서울 : 국방부, p.265.

후된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처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군사장비와 물자의 분류기준과 처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했지만, 1991년 이후 7년간 총 1조 1790억 마르크를 통일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군사통합에는 406억 7080만 마르크를 사용하였다.³⁸⁾ 이처럼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독일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남북한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 4절 탈냉전 이후 안보의 외주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군비를 축소하고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전쟁발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이 붕괴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힘의 공백 속에서 발칸 반도 등지에서는 민족 간 내전이 발생했다. 강대국들은 개입에 미온적이었고 유엔도 분쟁해결에 수완을 보이지 못했다. 냉전종식으로 무기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민간군사업체는 틈새시장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쟁지역에서 무기임차, 병참지원 등 전쟁을 대신 수행해주고 이윤을 창출한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병력과 국방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 국방예산 축소로 병력을 줄이고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축소·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안보의 외주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안보의 외주화가 통일 한국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38) 국방부(2003), 상계서, p.37

1) 안보의 외주화 사례 분석

국가가 평시에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면서 유사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자국 국민을 모병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군사업체와의 하청 계약은 군대의 병력부족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쟁에 투입된 미군은 모두 71만 1천 명이었다. 반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군은 48만 7천 명이었다. 13년 사이에 같은 전장에 투입된 미군의 수가 32% 줄었음에도 미군은 제2의 베트남전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신속한 승리를 거두었다. 1991년에 이라크로 간 미군은 60일분의 물과 식량, 탄환을 준비해 전투에 나섰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3년에는 2, 3일분의 비상식량 및 전투 장비를 준비하여 전투에 뛰어들었다. 공병이나 취사병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병사가 직접 세탁이나 청소를 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무기를 제외한 각종 물자와 용역을 군대에 공급하는 민간 군사기업이 뒤를 받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2004년 한 해 동안 민간 군사 기업에 속한 ‘민간인 병사’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이라크에서 활약했다. 미군 10명당 민간 군사 기업 직원 1명꼴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³⁹⁾

1992년 미국의 병참기업 ‘브라운 앤드 루트’가 소말리아에서 미군의 ‘희망 회복 작전’을 지원했고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발칸반도에서 미군의 작전을 지원했다. 정부회계감사원에서는 발칸에서 벌인 작전을 평가하고 브라운 앤드 루트가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미군 싱크탱크인 병참관리연구소의 1997년도 보고서는 브라운 앤드 루트가 군인 8,918명과 6억 3천 8백만 달러가 필요한 일을 4억 6천200만 달러와 직원 6,766명으로 해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현역 병력이 30%이상 감소하여 약 150만 명이 되었지만 펜타곤은 전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보조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확대함으로써 군의 대응 능력을 심각한 위

39) 피터W.싱어(2005), 『전쟁대행 주식회사』, 지식의 풍경, p.441

힘에 빠트리지 않고서도 병력을 더 많이 감축할 수 있었다.⁴⁰⁾

직접적인 전투분야도 마찬가지다. 현대화된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개발 국가들은 국제방산시장에서 군사력을 임차하여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보자.

아프리카의 저 개발 국가인 수단은 러시아의 미그-29기 용병 비행대를 고용함으로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F-117 및 B-2스텔스 폭격기 같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탐지하여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에티오피아는 이웃 나라 에리트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임대 용병 부대와 전문가 용병을 혼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호이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과 항공 방위, 다연장 포 운영, 레이더·전자전 등의 운영을 지원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수호이는 사는 에티오피아에 러시아제 수호이-27전투기(미국 F-15전투기에 견주는 수준)비행단을 판매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회사는 이 전투기들을 조종하고 유지·보수할 250명이 넘는 조종사와 정비사, 지상인력 등을 판매 계약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완벽한 공군을 통째로 임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러시아의 전직 장성들을 직접 고용하여 군사전략 입안을 맡기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참모 본부 회의의 경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러시아 출신 민간인 고문들이 참석하여 군사 작전 계획과 실행을 진두지휘했다고 한다.⁴¹⁾

냉전시대까지는 국가가 국내외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보편화된 방안은 중·장기 국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력을 증강하거나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이후로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은 국제방산시장에서 양질의 군사력을 고용하여 자신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주요전력을 임차함으로써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출은 외부화되며, 이런 군의 배치와 소모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부담 또한 외부화된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통일독일처럼 국방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방비의 감소로 주요 전력증강

40) 로버트 영 펠튼(2009), 『용병(License to kill)』, 교양인, pp.150~151

41) 피터W.싱어(2005), 전계서, pp.304~306

사업이 축소·지연⁴²⁾되어 구형장비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용한 경험에 있다. 노후 전투기의 수명연장이 한계에 도달하자 공군은 동맹국 미국에 F-16전투기의 임대를 요청했다.⁴³⁾ 국방비 감소로 병력이 감축되고 전력증강이 축소·지연되어 노후 장비의 교체가 늦어진다면 비전투분야를 외주화하고, 방산시장에서 주요 전력을 임차하는 것도 통일한국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2) 안보의 외주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 절에서는 안보의 외주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미국은 냉전 이후 병력이 감축된 상황에서 분쟁이 늘어나자 민간 군사 업체를 활용했다.⁴⁴⁾ 우리 정부도 ‘국방개혁 2.0’에서 민간 인력을 5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출산을 감소로 인해 병역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비 전투분야의 외주화를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군 마트(PX)근무 병사는 2021년까지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다.⁴⁵⁾ 우리나라의 군사 외주화 부분은 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주화 규모는 미국보다는 소규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미국과 같은 해양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타 대륙국가의 침공을 억지해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지만 역외 국가가 대규모 지상군을 미국 본토에 상륙시킨 것은 독립전쟁 때가 유일하다.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수행해도 미국 본토는 공격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9·11테러에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해도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 자국 영토 밖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현역 병력이 줄어들어도 예비군이나 민간

42) 예를 들어 F-15K는 120대 도입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60대만 도입하였다. 공군력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기종인 F-4와 F-5기종을 수명 연장하여 운용하였다.

43) 결과적으로 미국이 거부하여 이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44) 덕 체니 전 美 부통령은 부시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 파병이 300%나 증가한 반면 우리의 군대는 40% 줄어들었다. 피터W.싱어 (2005), 전개서, p.496

45) 조선일보, 2018년 7월28일

군사 업체를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해도 군의 대응 능력이 심각한 위협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반도 국가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다. 현해탄의 좁은 바다를 건너 일본이 있다. 순식간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북한도 큰 안보 위협이다. 우리가 예비군이 나 민간 군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군의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닉슨독트린과 같이 안보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 또는 美 항모공백 상태에서 발발한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같이 미국의 증원전력 전개 속도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병력을 크게 줄이고 외주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동맹국인 미국의 전시 증원전력을 감안하면 타국의 군사기업으로부터 항공기와 군사위성 및 전투 병력을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국방정책이다. 초강대국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세계질서를 유지할 국제적인 책무가 있다. 독일의 전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는 “미국 리더쉽의 반대말은 혼돈이라는 것을 미국의 적들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지역분쟁의 발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전방전개하여 지역분쟁의 발발을 억지하고 있다. 또한 발칸반도와 같은 실제 분쟁지역으로 파병하여 분쟁종결을 이끈다. 냉전 붕괴 이후 현역 미군은 줄어들었지만 분쟁은 증가했다. 대외 군사작전 소요가 많은 미국은 민간 군사 업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전 이후 대규모의 전투 병력을 대외에 전개하지 않고 있다.⁴⁶⁾ 국제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은 중견국가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대외에 전개시킬 가능성은 적다. 점령지의 안정화 정책을 위한 병력지원 및 민간 병참 지원의 소요가 적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미국도 안보의 사영화가 효율적이라서 군대를 감축한 것이 아니라, 냉전 붕괴 이후 병력이 30%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분쟁 발생이 증가하여 어쩔 수 없이 민

46) 2003년 이라크전 상황에서도 비전투병 중심의 3600여명의 재건지원부대를 파병했다.

간 군사 업체를 활용한 사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전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전투병과 및 후방 지원부대의 적절한 외주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선진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병력집약형 군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전투분야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외주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 3장 군사통합시 동맹국 및 주변국 영향요인 분석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강요에 의해 분단되었고, 통일 정부수립도 주변국의 외교적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완충지대인 한반도에서 여전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불화는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및 북·미 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사드(THAAD)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망(MD)구축 및 미·일 군사동맹 강화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과 북한 군부의 저항으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상태가 되지 않도록, 동맹국의 힘을 활용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동맹국의 역할(무력통일은 제외하고 북한붕괴와 합의통일 상황만 기술한다)과 주변국의 입장을 서술할 것이다.

제 1절 동맹국(미국)

1) 미군 해외주둔의 정치·군사적 의미

미국의 병력전개의 기원은 1821년 미 해군이 몇 척의 소함대를 위한 전진 기지를 동태평양에 만든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그로부터 77년이 지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뒤부터이다. 스페인 영토였던 필리핀과 괌에 미국은 해군 및 육군을 전진배치 하였다. 그 뒤 1914년 파나마 운하가 완성되면서 대서양에 집중되어 있던 미군이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의 전방전개도 본격화되었다.¹⁾

그 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의 동

1) Stanley B. Weeks, Charles A. Mecoins, The Armed Force of the USA in the Asia-Pacific Region, I. B. Tauris, 1999, pp.6~7

아시아 주둔은 기본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와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까지 미군의 전방배치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로, 미군이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정치적 이유는 이미 미국에 대서양 관계 이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진전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화정책 또는 개입정책이란 지역패권의 대두를 저지하고, 역내의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교류와 협력체제를 추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나 중국-대만관계 등 이 지역의 불안정요인에 대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동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과 질병, 그리고 테러리즘 등 세계규모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정치적 및 도덕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미군 해외주둔의 군사적인 목적은 전쟁의 억지 및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다양한 위기-가령, 평화집행, 평화유지, 비전투원 구출 등-에 대처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위협진압과 미 본토 및 여타 작전에서 증원군의 파견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서태평양부터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이 기동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병대의 긴급전개능력과 해·공군 작전행동의 지원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보급, 보수능력의 수준과 미군의 작전운용을 후방 지원하는 군사적 협력이 지역안정에 크게 공헌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의 지리·전략적인 위치는 미국에 의한 세계규모의 군사적 개입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

2) 美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은 성공적이고 강력한 동맹이자 아시아 평화·안보의 초석이라는 인식하에, 양국관계

6) 조성렬·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아카데미, pp.125~126

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Asi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강력한 역사적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으며, 2009년 2월 20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을 둔 세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⁷⁾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8년 8월 13일(현지시각)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견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전문가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이 지역안정군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 양국정부는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한반도 통일과정과 미국의 외교적 역할

미국 정부의 외교적인 역할이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독일통일과정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미국이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외교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이 독일통일을 달성할 때나 이탈리아가 통일 정부를 수립할 때 그 당시 유럽의 최강국가인 영국의 협력이 필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통일정부수립 과정에서 서독 콜 총리에 대한 아주 큰 신뢰를 보내면서 통일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그

7) 정충열(2014), 전거서, p.111~112

8) 『연합뉴스』, 8월 14일 보도내용

당시의 미국 정부였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4강은 1980년대 이전의 냉전시기에는 한·미·일과 북·중·러간에 두 중심축을 이루며 첨예하게 대치했던 국가였다. 미국은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한반도의 통일완성단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한반도와 국경을 길게 접하고 있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¹⁰⁾

당시 동서독의 통일에 반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도 미국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일찍이 브란트(Willy Brandt) 전 독일총리는 미국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한반도 통일에 미국을 활용하라고 한국 국민에게 충고한 바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동·서독이 통일 단계로 진입하자 소련은 물론이고 강력한 통일독일의 등장에 불안감과 의구심을 품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마저 반대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들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마한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의 실현가능성이 갑자기 대두되자 주변국은 과거 독일의 패권주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서독이 통일될 경우 유럽의 패권국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구체제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은 영국 및 프랑스와 달리 동독체제의 붕괴조짐이 보였던 1989년 10월부터 이미 독일 통일을 적극 준비,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다.

당시 미국은 서독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하여 서독을 서유럽 동맹국들 중 제1의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안정을 확보하는 정책구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정부는 서독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면서 1989년 12월 초 개최된 나토정상회담 및 유럽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네 가지 원칙(①독일민족의 자결권 존중, ②평화적·민주적 원칙에 의거한 통일과정, 서독이 과거 체결했던 기존협정과 조약의 준수, ③독일통일에 대한 전승4대국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소위 ‘유보권’의 존중, 그리

10) 오 핸런,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 한국국방연구원 KIDA 국제학술회의, 2001년 6월, pp.4~6

고 ④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원칙 존중 등이다)을 전제로 서방연합국이 독일 통일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¹¹⁾

한·미 동맹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강력한 통일한국의 출현을 기꺼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변강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의 힘만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완성단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자칫 국제적 또는 남북간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일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대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4) 통일완성단계에서 미국·주한미군의 역할

(1) 북한 붕괴시 북·중 국경의 경비와 미국의 역할

북한체제가 자체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붕괴하여 한국에 흡수되는 통일완성단계에서도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통일시나리오에서는 대량 탈북사태와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남한이 북한을 병합하는 형태의 통일을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변 국가들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응방향에 따라 미국의 역할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³⁾

첫째, 북한지역을 접수한 한국군은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수복지구’로 규정하여, 한국군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여 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 경우 곧바로 한국경찰과 검찰이 북한에 들어가 민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 뒤 약간의 간격을 두고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이 북한에 들어가 『충무계획』에 따라 북한 통치를 가능케 하는 행정 및 기간망 구축에 착수한다. 또한 북한의 인민군은 한·미 연합군의 지휘 하에 전면적인 해체작

11) 조성렬·김일영(2003), 전계서, p.283

12) 송승중,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국방저널”, 2001년 9월호.

13) 이정훈, 햇볕정책과 ‘작계 5027’의 개정-제2한반도전쟁, 그날 이후, <신동아>, 1999년 5월호, p.261

업에 들어간다.(북한군 해체작업은 제4장의 통일한국군 조직방향에서 상세하게 서술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군이 북한지역을 장악할 경우에 한국군의 북한군 해체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도시에 미군을 진주시켜 한국군과 한국경찰의 치안확보를 지원한다. 북한군 일부가 반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탈주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기 이전에 투항하지 않은 북한군 일부가 저항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지원요청을 할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군 일부의 요청으로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러를 잇는 국경선 주요 지역에 주한미군을 전진배치하고, 한국군은 미군의 최신 정보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조기경계활동에 나선다.

둘째는 접수된 북한지역을 ‘점령지구’로 규정하여 한·미 연합사를 중심으로 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군정의 실시를 위해 연합민사사령부를 설치한다. 이러한 군정 하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헌병과 군 검찰이 북한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통일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북한군 잔당세력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한국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이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군 일부가 투항을 거부하고 북·중 또는 북·러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저항을 계속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저항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소탕하거나 평화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또는 중재가 필요하다. 이때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미국의 외교적인 협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북한이 현재 유엔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의 붕괴로 남한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남북한의 명실상부한 통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통일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이 필요하다. 북한경제의 재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소위 통일비용-을 한국

단독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유엔의 통일국가 승인이나 국제기구의 경제복구 지원 등에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¹⁴⁾

<표 3-1>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작전 병력 소요¹⁵⁾¹⁶⁾

인구대비 비율(명)	1000 / 13	1000 / 20	1000 / 25
병력 규모(명)	321,300	494,000	618,000

※ 출처 : 추부길(2016),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주)에듀팩토리, p.188 참고하여 작성

(2) 합의 통일시 군대통합과 미국의 역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설사 그것이 통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물적, 인적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붕괴에 따라 한국으로 흡수 통일되던가, 아니면 북한이 경제재건에 성공하되 더 이상의 무력사용을 포기한 채 대등한 정치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체제를 갖고 있던 두 나라가 일단 ‘남북연합’을 거친 뒤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상호의 무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남북한 모두 합쳐 190만여 명에 가까운 병력을 어떻게 하면 군사적 충돌 없이 적정규모로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통일의 완성에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는 이질적인 두 체제의 군대가 하나로 통합된 실패 및 성공사례를 남북예멘과 동서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남북예멘에서의 군대통합의 사례를 보자. 남북예멘의 통일은 양측 지

14) 조성렬·김일영(2003), 전계서, pp.300~302

15) Mc Grath에 의하면 1999년의 코소보 작전때 NATO의 평화유지군이 1000:20 비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독일, 보스니아 내전 후의 NATO군은 주민 1천명당 7명 수준이었다. Mc Grath는 1000:20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 평균적으로 1000:13의 30%(4명)정도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야전교범 FM 3-24도 인구 1천명당 20/25(안정화/대반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추부길(2016),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주)에듀팩토리, p.186

16) 북한의 인구를 24,720,407명으로 산정한 미국 CIA World Factbook의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추부길(2016), 상계서, p.188

도자들의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권력의 반분을 주장하는 남예멘의 요구를 북예멘이 일단 수용하며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군 고위직도 남북예멘에 1:1로 배분되었다. 군 최고통수권자는 북예멘 출신의 대통령, 국방장관은 남예멘의 국방장관, 참모총장은 북예멘의 전 참모총장이 계승하였다. 국방부와 통합사령부의 요직도 남북예멘 출신에게 1:1로 안배되었다.

외형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실질적인 국가기능은 여전히 남북이 분리된 상태로 갈등을 거듭하였다. 군대는 물론 경찰, 정보조직과 행정조직을 각기 보유하여 사실상 독자적인 국가운영을 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야전군도 재편 내지는 재배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 당시의 주둔지에 계속 주둔하여 지휘체계의 단일화에 실패하였다. 이처럼 양측 군대의 기능적 통합의 부재는 그 뒤 남북예멘 정치지도자들의 갈등과 대립양상을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했다.¹⁷⁾

다음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의 군대통합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동서독에서 찾아볼 수 있다.(제 2장의 독일 군사통합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서독은 우세한 국력과 체제능력을 바탕으로 구동독군을 단기간의 준비(약 6주, 1990년 8.17 ~ 10.3)를 통하여 신속하게 연방군의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흡수함으로써 독일통일 이후 군사적인 체제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¹⁸⁾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군대통합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은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북·일 수교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북·미 대립이 해소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구도가 마련되는 ‘남북연합 단계’의 이행 이후가 될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남북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군축이 단계적 또는 동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남북연합

17) 황진환(1998), 『협력안보 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봉명, pp.205~206

18) 하정열(1996),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방안 :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팔복원 pp.205~206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했다고 해도 남북간의 평화를 담보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남북예멘에서 보듯이 사소한 정치적 이견과 이해대립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역할,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은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안정자(stabilizer)와 균형자(balancer)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속에서 주한미군은 남북연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안보우산을 제공하면서 남북한 군부간의 상호 신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남북연합이 실현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주한미군이 소규모이나마 북한지역에까지 주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⁹⁾ 이와 같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남북연합에서 한 단계 높은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길에 최소한 남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자기 영토 내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다면 남북한의 군대통합과정을 관리하는 안전장치로써 기능할 수도 있다.²⁰⁾

제 2절 주변국

1) 중국

중국은 한반도를 해양세력의 침략을 억지하는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지양하고 현상유지를 원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긴장완화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1인 수령 독재 및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만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북한정권의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

19) Harrison, op. cit., 2002, p.110.

20) 조성렬·김일영(2003), 전계서, pp.302~304

에 한·미·일의 첨단 군사력의 방과제 역할을 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나다. 또한 두 개의 한국을 유지할 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극대화 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핵잠수함, 핵항모 등)이 전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과는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대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상황이 중국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한 간에 전략적 균형을 이룬 가운데 실리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²¹⁾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존 체제에 도전하기보다는 균형화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²²⁾ 대 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신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중요하므로 주변국 갈등은 물론, 한반도의 급변사태로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미군의 한반도 주둔문제, 남북한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MD문제는 반대 입장에 있고,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는 철수를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휴전선을 월경하지 않는 선에서 주둔을 묵인하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²⁴⁾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통일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중립화된 국가를 원하고 있다.

대북 지원 및 보호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을 보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대신에 북한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경제특구를 통한 경험을 보다 확대 추진할 것이다.²⁵⁾

2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08), 『중기 국제정세 전망 2008~2013』, p.83

22) 이창형 외(2008), 『중국이나 미국이나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p.40

23) 최춘흠(2008),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변화와 대북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p.114

24) 김광열(2000), “남북한 군사통합-갈등요인과 대책”,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3집, p.308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중 상호 우호조약체결,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을 명분으로 북부 전구의 대규모 병력을 북한에 전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여 주둔을 정당화시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으로 돌려보낼 방안도 마땅치 않다. 친중 정권 수립 후 철군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있다. 중앙일보의 채병건 기자도 "북한 급변사태 후 중국이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친 중국 성향의 정권을 수립하면 한국은 난민만 받고 38선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변국은 결국 여기에 눈을 감는 참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²⁵⁾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은 통일한국의 한미동맹이 중국을 봉쇄하는 지역동맹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통일외교는 통일한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지역동맹의 출현을 반대하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국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알리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공고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한국이 유지되는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반도 분단 상황 유지를 더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일한국보다 두 개의 한국이라는 현상유지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남북의 국력이 합쳐진 통일한국이 현재의 분단된 한반도 정세보다 일본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선호하고 있고 한일우호관계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미·일 양국은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

2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2), 『2013-2017 중기국제정세전망』, p.58

26) 『중앙일보』, 2015년 10월 17일. 채병건, '시리아에서 얻는 북한 급변사태의 교훈'

여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시키며, 관련 부대의 훈련 및 조정 문제까지 협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²⁷⁾

한반도 통일 정부수립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이해는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본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최소화하여 남북관계악화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는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통일한국이 친중 성향을 띄는 것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남북한 군사통합 이후 통일 한국군이 건설되는 과정에 미군의 군사적 역할을 보조하며 국익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동북아시아 지역패권국가 출현을 억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군은 한반도통일 이후에도 지역안정군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는 대미추종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파성향의 집권세력이 군사대국이 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에 핵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2018년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내각(2012년)이후의 대외 정책 기초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 및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내려다보는] 외교’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과 함께 호주,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도 북핵문제,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지역 전략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 등 과거사 문제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²⁸⁾

27) 송화섭(2006), “미·일 동맹의 변혁과 보통 동맹화”, 『국방정책연구』 제71호, pp.5~54

2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7), 『2018 국제정세전망』, pp.64~65

3) 러시아

러시아 정부의 對통일한국 외교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통일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안보·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한국과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기조는 소련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글로벌차원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러시아의 핵심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달성되고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면 통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시기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의 방식으로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²⁹⁾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의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통일된 한반도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겐나디 추프린(Gennady Chufirin)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와 가까울 것이고 이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다.”³⁰⁾라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의 유리 바닌(Yury Vanin)은 남북한은 주변국에 신경 쓰지 말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하며, 주변국들은 남북한 통일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 급속히 일방적으로 통합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 박영호(2011),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p.118

30)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354

러시아는 한국통일에 큰 변수를 가지 나라는 아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극동지역보다는 유럽지역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對러시아 외교를 강화한다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제 4장 남북한 군사역량과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제 1절 남북한 군사력 비교

1) 북한군의 주요 군사력

(1) 재래식 군사력

① 북한의 지상군은 110만여 명으로 총참모부 예하 10개 정규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 방어 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개편과 통합전술지위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¹⁾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 ~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밀리 전인방사포 등 포병전력을 증강하였으며 기계화 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지역과 전선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²⁾

② 해군은 6만여 명으로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 ~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1) 국방부(2016),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p.24

2) 국방부(2016), 상거서, p.24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를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군은 11만여 명으로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3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 ~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³⁾

지대공 미사일(SAM)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④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방부(2016), 전거서, pp.24~25

⑤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단위의 노동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은 붉은 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⁴⁾

<표 4-1>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구 분	병 력	비 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여자)
노동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 청년 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 출처 : 국방부(2016),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p.27

(2) 탄도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SCUD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SCUD-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3,000km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4) 국방부, 전게서, pp.26~27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했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⁵⁾

<그림 4-1>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016년 4월)



※출처 : 국방부(2016),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p.28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도 7차례의 미사일발사 도발을 하였다. 미사일 형태별 능력은 아래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5) 국방부(2016), 전게서, pp.27~28

<표 4-2> 북한 미사일의 형태별 능력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은하 3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10,000 이상
탄두 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 1,000 (추정)	미상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서울: 국방부, 2012), p.292

생화학무기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화학화 선언’을 함에 따라 화학무기를 연구·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여 약 2,500~5,000톤의 각종 화학작용제를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생물학무기는 탄저균·천연두·페스트·야토균 및 출혈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3) 핵무기 개발 실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으로 발전시켰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5MWe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물질을 확보했으며,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⁷⁾

미 국방정보국(DIA)를 인용한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가 2018년 기준 약 60여 개로 증가했고, 강선지역에 최대 1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기껏해야 연간 7kg정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은 덜 중요해졌다. 1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국방부(2016), 전게서, p.28

7) 국방부(2016), 상게서, p.27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최대6700개)와 강선의 원심분리기를 합하면 18,700개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생산한 고농축우라늄(HEU)은 2017년까지 750kg 수준이다. 또한 독일의 오키연구소(Oko-Institut)의 추정으로 보면 HEU를 매년 300kg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2020년까지 HEU 1,650kg을 갖게 된다. 이 HEU로 폭발 규모 20kt급 핵탄두를 만들면 HEU 손실률(30%)을 감안하더라도 128발(1발=HEU 9kg)이다. 여기에 이미 만든 플루토늄탄 20발을 더하면 북한의 핵탄두 수가 영국(215발)에 이어 세계 6~7위로 급부상한다. 북한 핵탄두 중에는 수소탄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거의 완전한 핵 무장국이 된다는 말이다.⁸⁾

<표 4-3> 2018년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단위 : 개)

국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
수량	6550	6850	300	215	280	135	65	145	80

※ 『중앙일보』, 7월 6일 [김민석의 Mr.밀리터리] ‘북한은 핵무장국 됐는데 비핵화 협상은 계속 물음표’ 참고하여 작성.

북한이 많은 핵탄두를 가지면 경제와 체제생존을 목표로 했던 처음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다. 전략도 바뀐다. 통일연구원 김보미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로 중국 등 제3자를 외교·안보적으로 우군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하는 촉매(catalytic)전략에 성공했다. 한발 더 나아가 확증파괴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최소억제전략(인도·파키스탄)을 거쳐 공세전략으로 진행 중이다.('신흥 핵보유국의 부상 : 북한의 핵 능력과 핵전략 특징') 북한이 2017년 7~8월 야간에 쏜 화성-14형 미사일이나 일본을 넘겨 발사한 화성-12형은 이런 차원에서의 실전적 훈련이라는 분석이다.⁹⁾

8) 『중앙일보』, 7월 6일 [김민석의 Mr.밀리터리] ‘북한은 핵무장국 됐는데 비핵화 협상은 계속 물음표’

9) 『중앙일보』, 7월 6일, 상계기사.

<표 4-4> 북한의 핵전략 변화

개발초기목표	2017년 실현	2018년 현재	조만간 실현
경제이득 + 체제생존	축매전략 제3국을 끌어들이 위기모면	최소억제전략 인도·파키스탄 사례	공세적 핵전략

※ 『중앙일보』, 7월 6일 [김민석의 Mr.밀리터리] ‘북한은 핵무장국 됐는데 비핵화 협상은 계속 물음표’ 참고하여 작성.

2) 한국군의 주요 군사력

(1) 재래식 군사력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연장로켓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Ⅲ),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¹⁰⁾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방공포병사령부, 전투비행단,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F-16/KF-16 전투기를 주력전투기로 하여 최신형인 F-15K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공중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였다. 원거리 작전능력과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차기전투기¹¹⁾·공중급유기·정찰정보 수집체계·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KAMD)·우주감시체계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¹²⁾

(2) 대량살상무기

1992년 1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체결되었고 남한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굳건하기 때문에 핵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예정이다.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특정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려면 현역병 규모, 전력화 된 무기체계, 동원 예비 병력의 전투력, 경제력을 포함하는 전쟁지속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복수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비교하려면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병력규모와 무기체계 보유현황 이외에, 전력화 된 무기체계의 성능, 주요 전투장비 운용현황, 교육훈련체계, 그리고 동맹국가의 지원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

10) 국방부(2016), 전거서, pp.41~42

11)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12) 김의식(2014), 전거서, p.111

<표 4-5>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병력	육군	48.3만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61.8만여 명	128만여 명
육군	부대수	군단 12(특전사포함), 사단 40(해병대 포함) 기동여단 15(해병대 포함)	군단 17, 사단 82, 기동여단 74(교도여단 미포함)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포	5,7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기타	40여척	310여 척
공군	전투기	410여 대	810여 대
	헬기	690여 대	290여 대
	기타	290여 대	53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복무인원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서울: 국방부, p.236 / 조선일보, 2018년 7월 28일.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병력규모 및 재래식 무기의 숫자는 적지만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전력은 첨단화 되어 있다. 방어중심의 군사전략수립으로 북한의 기습도발 시 전쟁 초기의 피해가 클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는 매우 위협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굳건하다. 현재 28,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유사시 병력 69만여 명에 항공모함 5개 전단이 포함된 160여 척의 전투함정, 2천여 대의 항공기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증원전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전쟁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으로 전쟁지속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과 재래식 무기로 그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기습 도발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위기에 봉착할 경우 내부결속을 위해 대남 전면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갱도화된 군사시설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의 정밀타격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대략 300여 개로 추정되는 군수공장과 이른 시일 내 군수물자 생산이 가능한 민수용 산업시설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전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과 우방국의 지원이 없다면 국가 경제력이 미약하여 전쟁지속능력이 제한되고, 갱도화된 시설에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전쟁수행 물자는 겨우 2~3개월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기전 수행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¹³⁾

따라서 전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남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한다면 백중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 2절 통일한국군 전력구조 방향

1) 통일 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1) 병력규모 결정 시 영향 요소

한 국가는 국방비 규모, 국가안보전략, 주변국의 안보정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병력 규모와 같은 전반적인 군의 구조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 국방예산,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증원군 규모¹⁴⁾, 동맹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증원 능력 등이 병력을 결정하는 영향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은 광활한 국토와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때문에 다음의

13) 국방부(2012), 『국방백서 2012』, 서울 : 국방부, pp.30~31

14)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군 지원 규모에 대해서 중국군 18개 사단 40만여 명과 항공기 800여대, 함정 150여척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4년 10월 7일자.

<표 4-6>에서 보듯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늘날에는 무기체계가 발달하여 군 병력 1인당 점유하는 전장 면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토 크기에 비례해서 무한정 병력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¹⁵⁾

<표 4-6> 한반도 주변국의 영토 크기와 병력 수 비교

구분	미합중국	일본	중화민국	러시아
영토(km)	9,833,634km ²	377,873km ²	9,572,900km ²	17,080,200km ²
인구(명)	326,766,748	127,185,332	1,415,045,928	143,964,709
병력(명)	1,381,000	247,150	2,333,000	798,000

※출처 : 국방부(2016), 『국방백서 2016』, 서울 : 국방부, p.232 참고(병력). 영토와 인구는 인터넷 사이트 DAUM 검색.(검색일 2018년 8월 19일)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초강대국의 국가전략과 경제규모에 맞게 GDP의 3.33%를 투입하여 대규모 병력과 첨단무기 체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에서 교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DP의 1%를 투입하여 해군과 공군 중심의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병력은 소수 정예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미사일방어(MD)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중국은 아직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GDP대비 1.28%를 국방비에 투입함으로써 병력집약형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¹⁶⁾

<표 4-7> 한반도 주변국가 국방비와 병력 수 비교(2015년 기준)

구분	GDP (억\$)	국방비 (억\$)	GDP대비 국방비(%)	병력 수 (천명)	국민1인당 국방비(\$)
미국	180,000	5,975	3.33	1,381	681
일본	41,200	410	1.0	247	1,859
중국	114,000	1,458	1.28	2,333	323
러시아	12,400	516	4.18	798	106
한국	15,000	364	2.40	625	362

※출처 : 국방부(2016), 전계서. p.234

15) 걸프전에서 전장 1km²당 병력은 2.24명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36명에 비하면 1/15으로 줄어들었다. 이영우·노훈(1995). “장차전의 양상과 한국군의 장기적 발전방향”, 『국방논집』 제29호, 한국국방연구원, pp.3~27.

16) 2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건조하였고 J-20와 같은 첨단 스텔스기도 개발하였다. 동북아 지역패권 장악을 위해 군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국방력을 재건하기 위해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GDP대비 4.18%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GDP대비 2.4%를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 동맹관계에 따라 유지하는 병력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2)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한반도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로 독립하였다. 2차 대전 승전국에 의해 분단을 강요당했고, 1950년 한국전쟁까지 겪었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안보위협은 여전하다. 경제력 신장으로 군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패권을 노리고 있다. 이를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으로 냉전불화가 재현되고 있고 주변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으로 인한 미·중 갈등 연루의 위험성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국경문제, 일본과의 과거사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많은 안보위협 요소가 있다.

통일한국시대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을 억지하는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적정수준의 방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적인 군사전략 수행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3)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통일한국군의 현실적인 안보전략은 한미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자위적 방위 역량을 증대하여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적정병력 규모를 설정할 때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전략 기본목표를 영토방위로 설정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평시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분쟁 발발을 억지하되, 유사시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을 보유해야 한다.

김의식은 공격과 방어 시 적용되는 전투력 할당비율 3:1¹⁷⁾을 적용하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접경지역의 중국 심양군구¹⁸⁾ 5개 집단군과 러시아 극동군구 약 50만 명을 방어하는데 공격부대의 1/3 수준인 약 17만 명이 필요하고, 접경지역 부대를 위한 예비대가 1/3 수준으로 6만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와 중남부 지역 방어에는 약 14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상군 병력은 총 37만 명 정도가 필요하며, 여기에 해군과 공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각각 6만 명씩 12만 명과 해병대 2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는 51만여 명 수준을 제시하였다.¹⁹⁾

정충열 박사는 총 55만 명의 병력을 제시했는데 <표 4-8>과 같다.

<표 4-8> 통일 한국군 규모 판단(정충열)

총 병 력	육군							해군 (해병대 포함)	공군
	소계	사령부 및 지원부대	동 부 사	서 부 사	남 부 사	북 부 사	전략/ 기동 군단		
55만	30만	9만	3만	3만	3만	6만	6만	15만	10만

※출처 : 정충열(2014), 전계서, p.202.

위에서 추산한 병력은 1998년 합동참모본부에서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으로 제시한 55만여 명²⁰⁾과 유사한 규모이며, 2018년 7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방개혁 2.0’의 목표연도인 2022년에 유지하려는 50만 명²¹⁾에도 근접한 병력규모이다. 그밖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규모와 안보위협, 전력첨단화 수

17) 전투임무별 작전계획 수립 시 전투력은 공격부대 “3” : 방어부대 “1”의 비율로 할당한다. 육군본부(2012), 『지휘관 및 참모업무』, 대전 : 육군본부, pp.5~43

18) 중국군은 7대 군구(선양군구, 베이징군구, 지난군구, 난징군구, 광저우군구, 청두군구, 란저우군구)에서 5대 전구(북부전구, 중부전구, 동부전구, 남부전구 서부전구)로 개편되었다. 심양(선양)군구는 현재의 북부전구에 해당한다.

19) 김의식(2014), 전계서, pp.139~140

20) 합동참모본부(1998), 『군사전략 발전안』, 서울: 합동참모본부, p.5

21) 『조선일보』, 2018년 7월 28일.

준, 통일한국의 국토와 인구규모, 한미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도 <표 4-9>에서 보듯이 매우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국방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군의 병력보다 적은 60만 명 이하의 규모를 적정병력으로 판단하고 있다.²²⁾ 국방전문가들의 분석이 <표 4-10>에서 보여주는 카프만식 다중회귀 선형분석 방법에 의한 중진국형 병력 수 39~50만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군 병력의 적정수준은 군사 작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전투력 비율, 선행 연구, 그리고 ‘국방개혁 2.0’을 고려했을 때 약 50만 명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의 병력 규모라면 이후 통일한국의 인구가 약 7천600만²³⁾여 명으로 예측되므로 비용절감과 수월한 모집을 위해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가정²⁴⁾해도 상비군 병력을 모집하는 데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통일한국군 적정 병력규모 관련 학자들의 연구사례

연구자	적정병력수(만명)	병력수/인구수(%)	인구기준수(천만명)
박재하	23.3~39.8	0.39~0.65	6
김충영	40~46	0.6~0.7	6.65
조동호	44.2	0.64	6.9
이병근·유승경	46	0.67	6.9
윤진표	36	0.5	7
이창욱	50	0.7	7
이철기	24~28	0.3~0.35	8
이희선·김기수	40	0.58	6.9
제정관	50	0.7~0.85	7

※출처 : 권양주(2010),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적정 군사력과 한미동맹”,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291

22)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네트 박사는 55만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일부에는 인구대비 0.6%~0.9%선인 50~57만여 명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23) 2018년 8월 19일 기준 남한인구 5,163만 명, 북한인구 2,511만 명. (DAUM인터넷검색)

24) 징병제하에서 68만 명을 유지하는 비용과 모병제로 전환하여 30만 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구한 결과 모병제로 전환 시 약 13조 9,693억 원(2011년 보수체계 적용시)이 필요하며 징병제하에서 68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8조 7,950억 원보다 무려 5조 1,743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목(2011), 『모병제 도입과 국방인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교, p.36.

<표 4-10> 카프만식 다중회귀선형 분석법에 의한 군사력 규모

병력질(지수) 국방GNP(%)	후진국형(병력집약)		중진국형	선진국형(기술집약)	
	하	중하	중	중상	상
3.0~3.5	45~51	40~46	39~45	36~42	31~37
3.5~4.0	51~57	46~52	45~50	42~48	37~43

※ 출처 : 권양주(2010), 상계서, p.191

2) 통일한국군 조직 시 북한군 출신 편입 규모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판단했을 때, 남북한을 합쳐 최대 140만 명²⁵⁾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되는 인원과 편입대상자로 선발되는 북한군의 수는 통일한국군의 총병력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이전에 맺은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인민군의 의무 징집병은 자동으로 연방군에 편입하고, 장기복무군인과 경력군인은 3단계를 거쳐서 독일 연방군에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1990년 10월 통일직후에는 서독연방군과 동독인민군 출신을 83% : 17%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1992년 1월에는 88% : 12% 비율로 동독인민군 출신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1993년 9월 최종 선발 시에는 97% : 3% 비율로 더욱 축소하였다.²⁶⁾

그러나 북한군의 군사장비 중에는 통일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장비도 존재하며 군 시설을 정리 할 때도 많은 전문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3%보다는 많은 비율을 편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을 과도하게 편입하면 통일한국군에 동화되지 못하고 기존 한국군과 불화로 통합을 저해하는 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전투력만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군 내 적정한 북한군 출신들의 구성은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한국군 병력운용 개념 등을 고려했을 때 총병력의 10% 수준인 최대 5만 명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을 최대 5만 명 정도를 편입시켰을 때는 통일한국군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통합 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저항의지

25) 2018년 8월 기준 남한군 61만 8천여 명, 북한군 128만여 명이다.

26) 국방부(2003),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서울: 국방부, pp.152~157.

를 표출할 수는 없다. 반대세력을 모아 조직화한다고 하더라도 1:9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므로 쉽사리 저항을 시도할 수는 없는 규모이다. 반면에 소규모 단위로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체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조기에 함양시킬 수 있다.²⁷⁾

3) 통일한국군의 국방·안보정책과 군사전략

통일한국의 국방·안보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견인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²⁸⁾로 되어 있다.

통일한국의 국방·안보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전력 첨단화를 추진하고 주변국가와의 우호적인 군사외교를 확대하여 전쟁을 예방·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지역안보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며 주변국과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국제평화활동과 같은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위와 같은 국방·안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상호 군사적 신뢰가 부족하다.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관계가 굳건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이 지역안정군으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 미군의 주둔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은 북한경제 재건 등 전반적인 통일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27) 김의식(2014), 전계서, pp.144~146

28) 국방부(2016), 전계서, 서울 : 국방부, p.34

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미사일방어(MD)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안보정세에는 큰 변화의 물결이 있었다. 냉전시기 미·소의 핵 억지력으로 작용한 상호확증과괴²⁹⁾의 핵전략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³⁰⁾폐기되었고 군사선진국은 선제공격 후 보복당하지 않는 1차 공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격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듯 세계 군사개혁의 추세는 방공망을 현대화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³¹⁾를 구축하고 있다. 한반도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핵과 같은 전략무기를 보유하여 억지력을 발휘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통합으로 통일한국군이 건설된 이후에도 ‘한국형 3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지하는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에 대해 데이비스(Paul Davis)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①직접적 침략동기 억제, ②주변국과 문화적, 전통적 우호관계를 통한 상호존중 유지, ③불가침조약 등 국제적 장치들을 통한 억제, ④침략 시에 입게 될 손실(물리적 손실, 국제적 고립, 봉쇄 등) 등을 고려한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통일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억제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수립될 필요가 있다.

미래 국제안보의 추세에 맞게 통일 한국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29) 미국 핵전략 이론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서로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상태. 핵 억제의 이론적 개념이다. 인터넷 사이트 ‘DAUM’ 어학사전 검색.

30) 1972년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이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요격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했다. 위키백과사전 검색.

31) 제1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는 선제공격 계획(킬체인)이고, 제2축은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계획(한국형미사일방어, KAMD)이며, 제3축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응징하는 계획(대량응정보복, KMPR)이다. 2020년대까지 총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에 57조4795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터넷 사이트 ‘DAUM’ 백과사전 검색.

32) Paul Davis, Crisis Decision Making and Deterrence in Defense of State with Strong Neighbors; 최종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교수논총 16』 p.17에서 재인용.

통일 한국군의 전력에 맞는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고려하여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표 4-11> 미래의 위협과 도전형태

요소	도전형태
시간	현재(present) 위협 대비와 미래(future) 위협 대비
공간	현실세계(real world)와 가상세계(cyber world)
차원	재래식 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운용 전쟁
수준	고강도 분쟁(HIC)과 저강도 분쟁(LIC)
유형	정규전과 비정규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상황
전법	전격전(blitzkrieg) 형태와 게릴라전(guerrilla) 형태
성격	스마트(smart)/클린(clean)한 21세기 군사혁신 전쟁과 더티(dirty)한 4세대 전쟁
동맹	독자적 대비 상황과 한미연합 및 국제공조적 대비 상황
지역	국내적 안보상황과 국외적 안보상황 / 한반도 차원의 상황과 지역적 내지 글로벌 차원의 상황

※ 출처 : 노훈 외 국방발전 연구진(2010), 『국방정책 2030』, 한국국방연구원, p.27

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구한말 근대화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는 알타체제의 희생자가 되어 강요된 분단을 당했다. 통일정부를 열망했지만 강대국의 이기주의에 의해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세력권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첨예한 이념대립 속에서 1950년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남북이 190여만 명의 군사로 무장하여 대치중이며 북한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냉전 붕괴 후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무기(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를 개발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한을 인질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불화가 지속되는 것도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신장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구상 마지막 냉전구도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시절 중국·소련과 수교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을 틀을 다져왔다. 現 문재인 정부도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의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꾸준히 한미양국이 협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통일유형,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 주변국 영향 요인, 통일 한국군의 규모, 통일 한국군의 국방정책 등을 연구하고 고찰하였다.

국방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는 50만 명이다. 주변국의 군사편제로 볼 때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7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현재(2018년 7월 기준) 61만 8천

여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감축되는 11만 8000명 모두 육군이다. 같은 기간 장성 수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인다. 76명 중 육군 66명, 해·공군 각각 5명이다. 통일 한국의 인구를 7600만여 명으로 추정할 때 인구 대비 대략 0.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카프만식 다중회귀선형 분석법에 의한 군사력 규모를 참조해도 중진국형에 해당하는 병력 규모이다. 전반적인 인구규모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모병제로는 유지하기 힘든 병력이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편입되는 북한군의 규모는 북한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흡수하고 반란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총병력의 10%수준인 최대 5만여 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김의식 박사는 언급하고 있다.(4장의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참조)

이상적인 군사통합 모델은 독일로 선정하였다. 무력충돌이 없는 서독연방군 주도의 평화적인 군사통합이기 때문이다. 통일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려면 한국군 주도의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냉전불화로 인한 분단의 장기화, 외국 군대의 주둔 등과 같이 분단된 독일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많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무력충돌 후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군사통합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다. 동서독의 통일 및 군사통합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알타체제로 인한 강요된 분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 즉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면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가 중요하다. 일찍이 브란트(Willy Brandt) 독일의 前 총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역외 동맹국 미국이 독일의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에 미국을 잘 활용하라고 한국 국민에게 충고한 바 있다.(3장을 참조할 것) 또한 진보 정권의 외교안보 원로들도 남북한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안보의 외주화 현상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냉전 해체 이후 전반적인 군 병력의 감축과 지역분쟁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 군도 초저출산으로 비전투분야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통일한국군의 규모나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산부족으로 차세대 전투기(F-15K) 도입 규모가 당초 120여대에서 60여대로 축소되면서 공군력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 노후기종인 F-4, F-5전투기의 수명연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전력공백을 해소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그로인해 민간군사업체는 아니지만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F-16전투기 임대를 요청하여 항공력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결과적으로 전투기 임대는 미국이 거절하였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초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전투분야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예를 들어 군 마트(PX) 근무 병사를 2021년까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무기 폐기를 아직은 장담할 수 없고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과 남북한 군사통합은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은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 안보현실에 적합한 군사통합방안을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바람직한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을 연구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통일 한국군의 규모는 주변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4장에서 김의식 박사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방어하는 군사로 17만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북부전구와 러시아 극동군 등 약 50만 명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부대의 1/3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병력 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

일 군사통합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주변국들은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으로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군사굴기,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와 전력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동맹외교의 중요성이다. 중국·일본·러시아가 강력한 통일한국군의 출현을 반대한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동맹국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을 지역안정군으로 지속적으로 주둔시킨다. 이때 특정국가를 가상적으로 겨냥한 지역동맹화에는 반대한다. 주한미군의 지위는 동맹군, 역할은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한다.(4장 참조)

세 번째,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이 약 6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하였다. 만약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결렬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공세적인 핵전략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무기 폐기가 필수적이다. 북미협상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해도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핵 포기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동·서독 통일 및 군사통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정적인 남북한 군사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군사통합과정에서 구동독군이 반발, 동독 군사장비 처리, 주변국가의 반발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냉전갈등으로 장기간 분단된 독일과 한반도는 유사점이 많다. 독일군사통합사례를 참고하여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 번째, 주변국의 대(對)한반도 군사·안보 정책을 이해하는데 자료부족으로 한계점이 있었다. 중국 북부전구의 군사력 운용이나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군사력 운용 자율성 등 통일한국군의 운용에 필요한 주변국의 군사정보는 자료도 부족하고 정보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통일한국에 대해 주변국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통합 과정에 주변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미래 국제정세나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중국의 군사력 신장,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 등 한반도 군사정책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이슈를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현 시점에서 통일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산출은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병력 운용 및 국방정책은 국방예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국방예산이 감축되어 군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축소 또는 지연된 상황을 경험했다. 구형전투장비의 수명연장을 통해 안보공백을 해소했다. 독일은 통일비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하였고, 병력도 37만 명에서 4만 명을 감축하여 33만 명을 운용하였다. 우리나라도 북한재건비용 때문에 국방예산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예산부족으로 50만 명 보다 적은 병력을 운용할 가능성과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축소·지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무기폐기가 필수인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폐기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경협을 확대하기로 남북정상이 약속했지만 북한의 전략무기폐기가 수반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남한 내부에서도 반대에 봉착할 것이다.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남

북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했지만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군사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남한의 손발만 묶어냈다고 평가한다. 또한 북한이 1인 수령 독재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협 및 인적교류도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네 번째, 남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미협상이 결렬되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투명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는 군사시설도 많다. 북한의 군사동향을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섯 번째, 북한군 안정화 방안과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을 논문에 수록하지 못했다. 논문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평화통일과 안정적인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전역하는 북한군의 사회정착을 보장하는 안정화방안을 제시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북미협상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주변국의 안보정책도 세심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했듯, 우리정부 또한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국민과의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정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봄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전략무기 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와 통일독일의 국방정책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08). 『중기 국제정세 전망 2008~201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중기 국제정세 전망 2013~2017』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2018 국제정세 전망』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 서울 : 국방부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 서울 : 국방부
- 국방부. (2003). 『독일군사통합 자료집』 . 서울: 국방부
- 권양주. (2009).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권양주. (2010).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권양주. (2009).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접근 전략 연구”. 동국대 박사 학위 논문
- 김광열. (2000). “남북한 군사통합-갈등요인과 대책.”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 제2집
- 김의식. (2014).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과 전략』 . 서울 : 도서출판 선인
- 김동명. (2010).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김학준. (1989). 『한국전쟁』 , 서울 : 박영사
- 김도태. (1993).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 . 서울 : 웃고 문화사
- 백승주. (2009). 『포스트 김정일 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 손기웅. (200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 서울 : 늘봄플러스
- 송승중.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국방저널』 , 2001년 9월호
- 송화섭. (2006). “미·일 동맹의 변혁과 보통 동맹화.” 『국방정책연구』 . 제 71호
- 이상목. (2011). 『모병제 도입과 국방인력 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서울 : 국방대학교

- 유호열. (2006).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유지호(1997). 『예멘의 남북통일』 . 서울 : 서문당
- 윤덕민. (1999).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국제 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 이창욱(1998).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 국군의 역할』 . 서울 : 세종연구소
- 이철기. (2002).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
학위 논문
- 이문규. (1998). “남북한 통합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논총』 . 84호
- 이정훈. 『햇볕정책과 ‘작계 5027’의 개정-제2의 한반도 전쟁, 그날 이후』 ,
<신동아>, 1999년 5월호.
- 육군본부. (2012). 『지휘관 및 참모업무』 , 대전 : 육군본부
- 정충열. (2014).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 서울 : 시간의 물레
- 제정관. (1998).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통일 국군건설방향”. 경남대 박사
학위 논문
- 제정관. (2001).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통일국군건설방향.” 『군사논단』 .
29호
- 추부길. (2016).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 서울 : (주)에듀팩토리
- 최춘흠. (2008).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 합동참모본부. (1998). 『군사전략 발전안』 . 서울: 합동참모본부
- 하정열. (1996). 『한반도 통일 후 군사 통합 방안』 . 서울 : 팔복원
- 황진환. (1998). 『협력안보시대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 통제를 중심으로』 . 봉명
- 황병무. (2004). 『한국안보의 영역, 쟁점, 정책』 . 서울: 봉명
- 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 경기 : 도서출판 한울
- 박영호·박종철. (1993).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 민족통일원
- 정선구·문채봉. (2010). 『독일통일과 군간부 인력획득』 . 서울 : 한국국방연
구원
- 이창형 외. (2008). 『중국이나 미국이나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이영우·노훈. (1995). “장차전의 양상과 한국군의 장기적 발전방향”.

『국방 논집』 . 제29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노훈 외 국방발전 연구진. (2000). 『국방정책 2030』 . 서울 : 한국국방연구
원

장흥기·이량·이만중(1994).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 서울 : 한국국
방연구원

2. 외국문헌

로버트 영 펠튼 / 윤길순 옮김. (2009). 『용병』 . 서울 : 교양인

베르너 바이덴펠트·칼-루돌프 코르테. (1998).

『독일통일백서』 . 서울 : 한겨레신문
사

오 헨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 한국국방연구원 KIDA 국제학술회
의. 2001년 6월

주독대사관. (2009). “통독 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안.” 주독대사관 무관부

주독대사관. (1992). “통독 후 독일의 군사현황.” 주독대사관 무관부

피터 W. 싱어 / 유강은 옮김. (2005). 『전쟁대행 주식회사』 , 서울 : 지식의
풍경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era(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5

Paul Davis, Crisis Decision Making and Deterrence in Defense of State
with Strong Neighbors; 최종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교수논총 16』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p.107~108

Stanley B. Weeks, Charles A. Mecoins, The Armed Force of the

USA in the Asia-Pacific Region, I. B. Tauris, 1999, pp.6~7

4. 인터넷사이트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서울신문. m.seoul.co.kr

통계청. m.kostat.go.kr

위키백과. en.wikipedia.org

중앙일보. joongang.joins.com

조선일보. m.chosun.com

연합뉴스. www.yna.co.kr

다음. www.daum.net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of Militar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Focused on German Military Integration Case and
Unification Korean Armed Forc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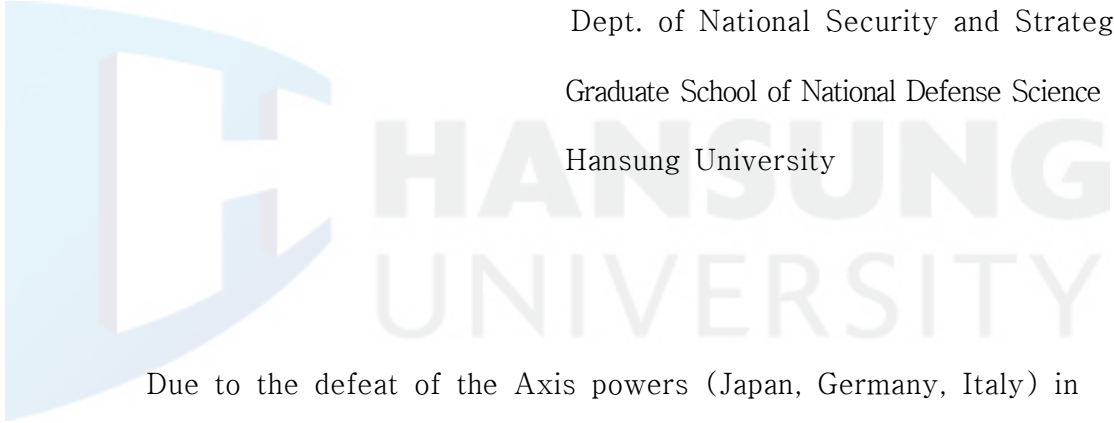
Lee, Jae-In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Due to the defeat of the Axis powers (Japan, Germany, Italy) in World War II, Korea became independent from the Japanese colonies. The coalition decided in the Yalta Talks(February 1945) to partition the 38th parallel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became a communist state, and South Korea occupied by the US military became a liberal democracy.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June 25, 1950, made the Korean Peninsula an international battlefield for three years, and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South Korea signe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on October 1, 1953 to deter the threat of communism and remains the greatest asset of

the ROK's foreign security.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1965, Northeast Asia has been in conflict with the forces of the maritime forces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the continental forc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agreed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even after reunification and to keep US force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s regional stabilized forces.

The Cold War ended with the victory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The Soviet Union has collapsed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Eastern Europe, ar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a market economy. North Korea was isolated diplomatically in the 1990s due to South Korea-Soviet diplomatic relation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The collapse of the rationing system in the mid-1990s due to economic hardship and famine further threatened the one-man dictatorship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for its regime's safety. The brinkmanship tactic has heightened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develop missiles capable of attacking the US mainland. Even after Kim Jong-un's successor succeeded, there were continuous provocations such as the 6th nuclear test, the long-range missile test launch, and the development of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Fortunately, there is a thawing mood i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The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t Panmunjom.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North American Summit was held in Singapor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greed to a massive US - ROK military training delay, such as the UFG,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FVD: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Although the econo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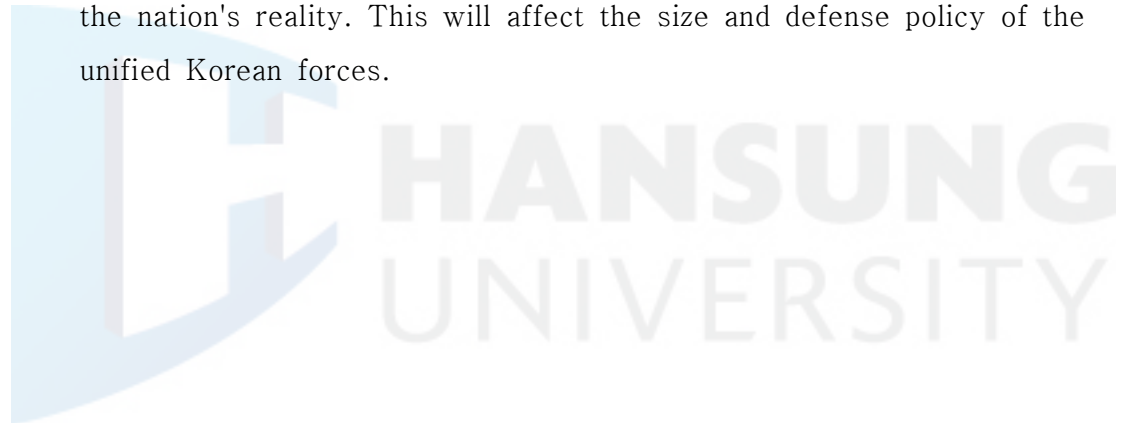
sanctions on the North contin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discussed, such as the result of the inter-Korean railroad. There is also a growing opinion tha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promote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scholars believe that North Korea's Kim Jong Eun made a strategic decision not to guarantee the stay security through nuclear armed forces but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guarantee the stay through diplomatic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not only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military integration is important. North Korean regional commanders should be prevented from growing into armed groups and local military clique. In order to preven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expanding into international conflict situations in which neighboring countries are engaged in military interven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able disengagement of North Korean troop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tudy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problems should be approached in various directions.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ase studies on military integration in other countries,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ways to outsource security, and future population trend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utsourcing of security can be a little unfamiliar.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it because it is the outsourcing plan of security that the scholars claiming that the size of the unified Korean army is between 200,000 and 300,000. Indeed, when our ally, the United States, conducted Iraqi warfare in 2003, it was able to prepare for

war with fewer troops than in the 1991 Gulf War through outsourcing of the non-combat sector. Also, if the United States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gional dispute on the other continent, i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 reduced or delayed, a private military company may be put into operation for stabiliz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examples of military integration in other countries (Germany-centered),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impact facto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ys to privatize security. The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for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ocused on the US role. We will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utsourcing security to see if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s reality. This will affect the size and defense policy of the unified Korean forces.



【Key words】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fluential factors in neighboring countries, Outsourcing of security, Unification Korean Arm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and US diplomatic relations

